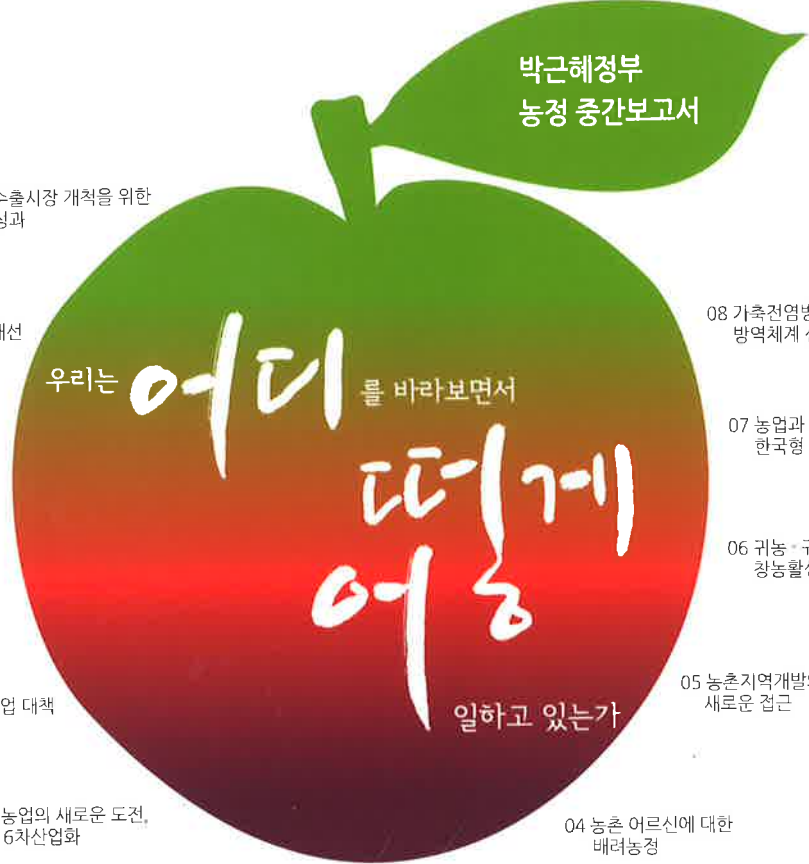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



09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과 성과

10 정부3.0에 기초한 농식품 분야의 일하는 방식 개선

11 신 성장동력 창출과 현장중심의 기술농업

12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과 '복지'의 결합

01 쌀 관세화의 추진과 쌀산업 대책

02 농업의 새로운 도전, 6차산업화

04 농촌 어르신에 대한 배려농정

08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방역체계 선진화

07 농업과 ICT의 융합, 한국형 스마트 팜 확산

06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과 창농활성화

05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

03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머 리 말

농축산물은 서민 경제와 밀접하고 매일 소비되는 상품인 만큼, 정부 정책이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공산품이나 서비스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배추 가격파동’은 농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 필요성을 보다 높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정책은 생산자, 중간 유통인, 소비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과거 역대 정부마다 국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농축산물 유통문제를 농정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과거 20년간의 대책을 점검·평가하고,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비지로 이동해 소비자에게 분산·소비되는 유통 전 과정에 대한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선정, 대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농축산물 유통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는 어느 한 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유통단계의 이음새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이음새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농축산물 가격 및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박근혜정부 유통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책임자들이 3년간의 추진상황을 직접 정리하며,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점검하여 새롭게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 책임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지게 하고, 국민에게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 이 책자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유통정책을 찾아 비교하고, 박근혜정부의 성과를 재정리하는데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허 태 응**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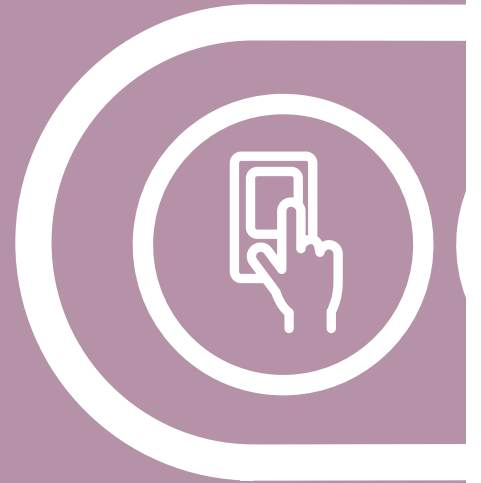
I. 추진배경	6
1.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유통의 특징	8
2. 농축산물 유통단계 및 품목별 유통구조 특징	9
3. 농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과제	12
II. 그동안 농축산물 유통정책의 추진과 평가	16
1. 직거래 정책	18
2. 도매시장 정책	21
3. 산지 조직화 정책	23
4. 수급안정 정책	25
5. 축산물 유통 정책	27
III. 박근혜정부의 농축산물 유통정책 추진	29
1. 농축산물 유통정책 구상	30
2. 농축산물 유통정책 특징	45
IV. 박근혜정부 농축산물 유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57
1. 정책 성과	58
2. 향후 과제	73
〈부록〉 농축산물 유통정책 개선사례 20선	85



I

추진배경

- 1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유통의 특징
- 2 농축산물 유통단계 및 품목별 유통구조 특징
- 3 농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과제





1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유통의 특징

농축산물은 생활 필수 품목으로 심한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

- 반면, 공급의 경우 (예상)가격에 따라 생산(재배)면적이 변동하기는 하나, 작황이나 기상 여건에 크게 좌우되어 공급 과부족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특징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부패·변질되기 쉽고, 대체적으로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품목이 많아 공산품에 비하여 유통비용이 높은 문제

- 특히, 우리나라는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가가 영세*하고 산지 조직화도 미흡한 상황으로 소비자까지 4단계** 이상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는 실정

* 호당 재배면적(ha) : ('90) 채소 1.8 / 과수 1.2 → ('14) 채소 1.1 / 과수 1.0

** 농가(생산) → 수집 조직(선별 등) → 도매시장 → 소매상(재분류, 판매) → 소비자

농축산물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일 농축산물을 거래하고 있기에, 가격 변화 등 거래관련 변수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특히 높은 분야

- 농축산물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는 등 필연적으로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특징
- 참여자간 이해가 대립되고 상호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돌이 생기기 쉬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가격 및 생산량의 급등락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민감하게 반응

농축산물의 이러한 특성들이 유통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생산 및 소비에서의 충격이 유통과정에서 증폭되는 시장구조로 인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



2 농축산물 유통단계 및 품목별 유통구조 특징

농축산물 유통단계

산지 수집단계는 지역농협 위주 생산자단체와 산지유통인*이 양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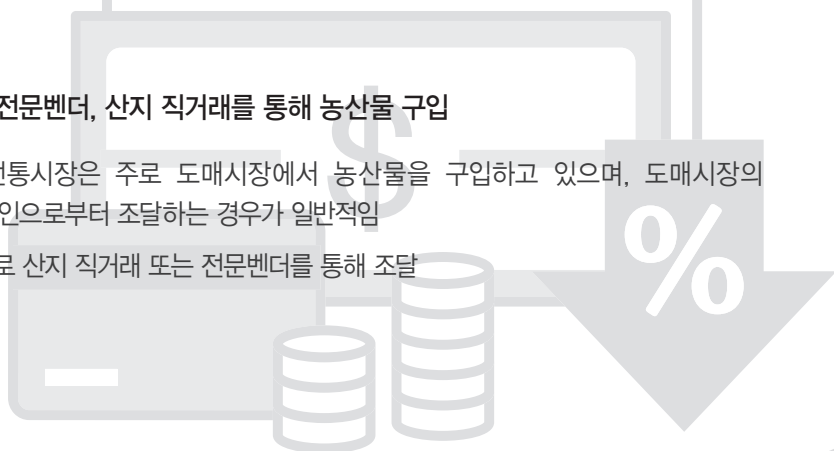
- * 작기별로 전국 산지를 순회하며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포전매입을 하는 전문산지유통인과 지역 내에서 영농을 겸하는 지역산지유통인으로 구분됨
- 지역농협은 농민들이 생산한 청과물의 수집·선별·공동출하를 지원하거나 계약재배('15년 노지채소 생산량의 22%)를 수행
- 농가를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달리, 산지유통인*은 포전거래나 단순 매입 방식 등으로 작기별로 주산지에서 활동
- * '14년 기준 7,729명의 산지유통인이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하여 출하 중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이 수집한 청과물은 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쳐 분산됨

- 도매단계(도매시장)의 청과물 유통경로는 크게 기존 경매방식*과 '04년 시작한 시장도매인 방식**으로 나뉘고 있음
- * 도매시장에 출하·상장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 주관으로 경매를 실시하고, 이를 중도매인이 낙찰 받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 **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직접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거치지 않는게 특징

소매단계는 도매시장, 전문벤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 구입

- 중소 슈퍼마켓, 전통시장은 주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대형유통업체는 주로 산지 직거래 또는 전문벤더를 통해 조달



농축산물 품목별 유통구조 특징

채소 및 과일류는 보통 4~5단계의 유통경로를 거치며 도매시장의 취급 비중이 높음

- 채소류는 산지유통인의 취급 비중(80% 내외)이 높고, 과일류는 농협 및 농협 산지공판장의 취급 비중(60% 내외)이 높음

쌀의 경우, 대부분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업체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소비자 유통업체간 거래가 70% 내외, 임도정업체를 통한 경로가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축산물은 5~6단계의 유통경로를 거치는 등 복잡한 유통구조

- 특히, 도축·가공공장이 영세하고, 유통업체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임대료·인건비 등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높은 편임

〈표 1〉 품목별 유통경로

품 목	주요 유통경로
채 소	· 생산자 → 산지유통인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 소매상 → 소비자
과 일	· 생산자 → 생산자단체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 소매상 → 소비자
쌀	· 생산자 → RPC → 소비자 유통업체 → 소비자
축산물	· 생산자 → 우시장 또는 산지 유통주체(수집상, 생산자단체) → 도축장(공판장) → 소매상 → 유통업체(정육점) → 소비자

유통단계별 참여주체 및 유통경로

1 유통단계별 참여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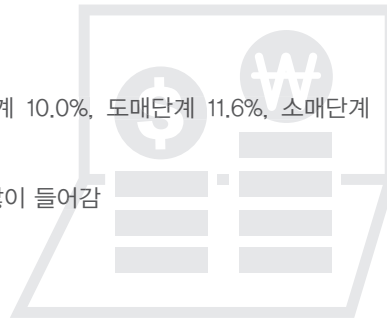
- (출하) 생산자(개인농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가 직접 또는 생산자 단체(지역 농협), 산지유통인*을 거쳐 도매시장에 청과물 출하
 - *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자로 공영도매시장에 '14년 기준 7,729명 등록
- (도매)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서 청과물을 경매에 상장하고, 중도매인이 입찰하여 소매상 등에게 판매
 - * '14년 기준 전국에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32개소가 있으며, 청과물 도매시장 법인 83개, 중도매인 6,328명 등이 총 10.2조원 규모 거래
- (소매) 소매상, 대형유통업체 등이 소비자에게 청과물 판매
- (물류) 출하 → 도매 → 소매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며, 개인 화물운송사업자(5톤트럭)가 약 90%의 청과물 운송을 대행

2 주요 농산물 유통경로

- 일반적으로 생산자 → 산지조직(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등) → 도매상(중간도매상 포함) → 소매상(대형유통업체 포함) → 소비자에게 유통
- '14년의 경우 산지유통 단계에서는 생산자단체(41%) 및 산지유통인(38%) 취급비중이 가장 높고, 산지출하 이후에는 대부분 도매상(59.8%)을 거쳐 소비지로 유통

3 유통비용 구조

- '14년 농축산물 유통비용률은 44.8%이며, 출하단계 10.0%, 도매단계 11.6%, 소매단계 23.2%로 소매단계 비중이 가장 높음
- 소매단계에서 임대료 · 인건비, 재포장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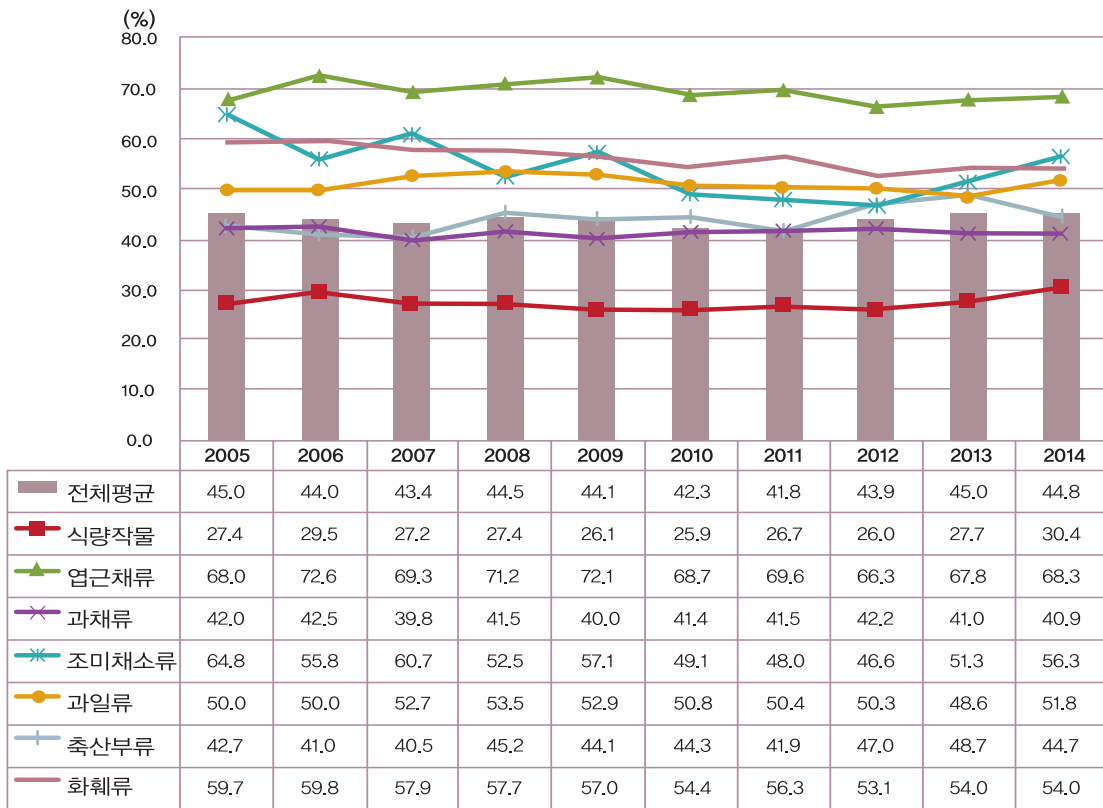


3 농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과제

유통비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최근 농축산물의 평균 유통비용률은 40~45% 수준에서 등락 반복

- 유통과정에서 손실률이 높고 산지유통인의 취급 비중이 높은 채소류(무·배추 등)는 약 70% 수준, 과일류는 약 50% 수준
- 저장성이 높은 식량작물(쌀, 감자 등)은 20~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그림 1〉 농축산물 유통비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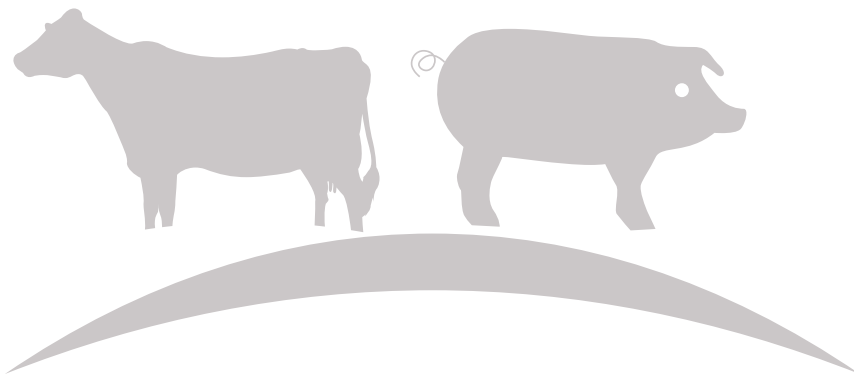
축산물의 경우, 도축 및 부위별 정형 단계(생축 → 지육 → 부분육 → 정육)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유통비용 발생은 불가피

- * 소 : (생축) 100% → (지육) 59.6 → (부분육) 40.7 → (정육) 37.8
- * 돼지 : (생축) 100% → (지육) 77 → (부분육) 52.7 → (정육) 50.6

- 다만, 5~6단계의 복잡한 유통 단계로 유통비용이 과다하다는 평가
- * 농가 → 수집상(우시장) → 공판장(도축장) → 중도매인(도매상) → 소매상(식육판매점) → 소비자

농축산물의 높은 유통비용률은 농축산물의 특성, 복잡한 유통단계 및 경로간 경쟁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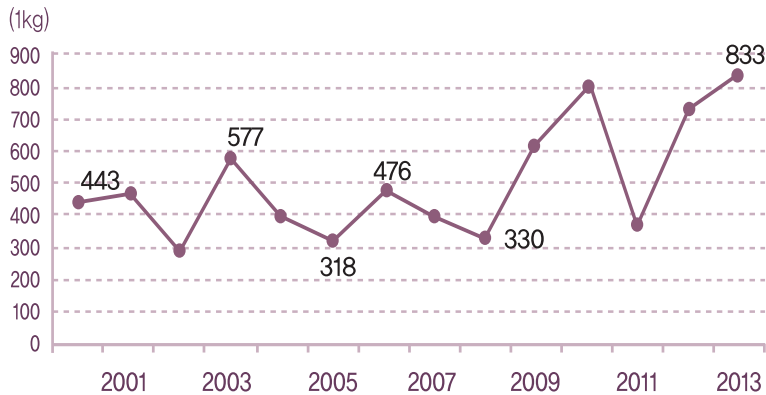
- 공산품과 달리 가격 대비 큰 부피·중량, 부패·감모 등의 높은 손실률과 같은 농축산물의 특성이 주된 요인의 하나임
- 농산물 유통의 주경로라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경우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유통주체가 많아 부수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도매시장 내 상품 표준화 및 기계화 부족에 따른 물류의 비효율성은 유통비용 증가를 초래
- 대형마트·도매시장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경로가 정착되고 있으나, 경쟁관계를 갖는 대체 경로의 경우 유통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미흡한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



기상여건 등에 따른 높은 가격 변동성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높은 수준

- 농산물 중에서도 저장성이 낮고 기후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채소류(무·배추 등) 등 청과류의 가격 변동성이 높은 편으로 기상이변 등 공급 충격에 취약한 농산물 특성에 기인



〈그림 2〉 연도별 배추 가격 변동(등락) 추이 (도매가격 기준)

도매시장 경매제와 현행 농축산물 수급관리체계의 한계에 기인

- 도매시장의 주된 거래방식인 경매제에서 결정된 가격이 시장의 대표가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매제의 특성상 단기적 수급상황과 연동되는 구조
- 가격 안정 차원에서 경매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12.8월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제와 동등한 거래방식으로 도입하였으나, 30여 년간 경매제에 익숙한 유통주체들의 참여는 미흡한 상황
- 농업관측 및 계약재배·수매비축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나 정확한 사전관측과 관측 결과의 활용이 미흡하고, 여전히 수급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커 생산자단체·지자체 등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이 부족한 실정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연동

소비자가격은 산지 출하가격에 상품화, 저장 등의 유통비용이 추가로 반영되어 결정되고, 산지 가격은 상품성과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임

- * 다만, 수집상의 위험분산, 농작업 대행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산지가격 상승 시 신속적으로 상승하는 소비자가격이 산지가격 하락 시에는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비대칭성이 존재

산지 공급가격과 소비지 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시스템 미약

- * '10년 배추가격 폭등(400%)시에도 한살림 생협은 가격 급변동시 공급자 가격 보전 체계를 구비하여 평시 계약가격 수준 (2천원/포기)으로 판매한 사례



II

그동안 농축산물 유통정책의 추진과 평가

- 1 직거래 정책
- 2 도매시장 정책
- 3 산지 조직화 정책
- 4 수급안정 정책
- 5 축산물 유통 정책





1 직거래 정책

〈표 2〉 과거 정부의 농축산물 유통정책 주요내용

분야	정책 내용
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위주, 판매 중심 직거래 장터 지원 ▪ 행사 성격, 농가 개인 홈페이지를 수단으로 활용
도매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32개) 건립('79~'08) 완료로 농가 출하권 보장 ▪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경매위주 거래제도 완성
산지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시설 확충 ▪ 공동마케팅 주체육성(조공법인, 시군유통회사, 대형 브랜드 경영체 등)
수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 계약재배, 유통협약·명령, 자조금 도입 (생산자단체 중심) ▪ 배추파동을 계기로 정부역할 강화
축산물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정책과제

이전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정책은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직거래장터 개최를 확대하거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직거래장터는 '99년 정부과천청사 직거래장터 등 지자체 또는 농협이 운영하는 장터 위주로 운영을 지원

- 특히, 직거래장터 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09년 과천 경마공원 내에 전국의 약 120여개 농가가 참여하는 대형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최초로 개장·운영
- 이외에도 전국 관공서·아파트단지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직거래장터 개설 확대 추진

전자상거래의 경우 '99년부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통해 개별농가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지원

- 이후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기 위해 '00년 농산물 B2C 쇼핑몰 '신선몰'을 개발하고, '09년 B2B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해 산지와 소비지간 대량거래를 유도하고, 물류비용 절감 추진

그 외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과 파머스마켓 시설 지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직거래 지원 정책 실시

정책성과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직거래에 대해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유통 형태로 인식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있었기에 직거래가 농가소득 제고 및 단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노변판매, 농장 직접판매 등의 운영형태에서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매장, 전자상거래 등의 형태로 확대되는 효과

* 직거래장터는 '09년도까지 전국에서 480여개 운영

보완할 점

다만, 하드웨어 위주, 판매 중심으로 직거래 정책이 지원되고, 주로 명절 등의 시기에 일회성·산발적 행사로 추진됨에 따라 대안유통경로로 자리매김 하는데 한계

특히, 그간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직거래 주체를 육성하는 등 생산자 중심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소비자 선호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미흡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직거래를 명절 때 열리는 '장터', '국도변 직판대', '농업인 온라인 쇼핑몰' 수준으로 인식

또한, 그간 정부별로 직거래에 대해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는 등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일관성도 부족했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추진 체계 마련도 미흡

-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 산지 개별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직거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혼란 가중 및 실패 우려

* 직판장 붐이 크게 일어나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에서 직판장을 개설했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대부분 2~3년 내 쇠퇴

〈표 3〉 과거 정부별 직거래 정책의 변화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목적	판로 확대	유통효율	도농교류	유통효율
직거래 범위	협의	최(最) 광의 (대형유통업체 포함)	협의	광의
정책 관점	대외개방에 대비한 농가 지원수단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핵심 수단	도농교류의 수단	유통구조개선의 보완대책 으로 추진
주요 정책	- 직거래장터 지원 - 생산자단체의 유통 자회사 설립	- 농협 역할 강화 - 직거래장터 확대 - 산지와 대형유통업체간 거래 개시 - 전자상거래 개시	- '사촌'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B2B 확대를 위한 '사이버 거래소' 설립 - 직거래장터 정례화
주요 특징	- 지자체, 농협 중심 도시 직판장 건립	- 직거래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과제로 추진 - 직거래 범위를 도매시장 외 거래로 확대	- 직거래 정책·논의 축소	- 정부에서는 유통 효율 중심의 직거래 추진 - 민간에서는 도농신뢰 개념의 직거래 추진

2 도매시장 정책

정책과제

과거 위탁상의 폐해를 극복하고, 영세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에 기반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76년 제정하였고, '85년 가락 도매시장을 개장한 이래로 전국 32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함으로써 상장경매제 정착을 추진

정책성과

경매는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거래과정이 공정하고, 거래물량·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규모 출하자 보호에 장점

도매시장 내 수집(도매시장법인)과 분산(중도매인) 기능의 분리와 도매시장법인 매수 금지, 중도매인간 거래 금지 등의 규제로 출하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가 극대화

보완할 점

상장경매제 정착으로 도매시장 내 공정거래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 성장, 소비자 요구 다변화 등 최근 소비자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이에 기존 도매시장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중심의 관리에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기존 상장경매 방식 외에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거래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매매참가인을 통한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간 상생 거래 등을 추구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으로 제시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겸업사업 및 매수 일부 허용, 중도매인간 거래 일부 허용 등을 통해 도매시장도 출하자와 소비자 요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지향'을 추구

-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도매시장 내 전처리·가공시설 설치 등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

〈표 4〉 과거 정부별 도매시장 정책의 변화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 조기건설 - 전품목상장거래 실시 - 최저가격 제시제도 도입 - 도매시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 상장예외제도 활용 - 전자경매도입 - 도매시장 평가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도매인제 도입 (강서도매시장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 - 정가·수의매매 제도 도입 ('12.8. 농안법 개정)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경매제 정착 - 농안법파동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경매를 통한 거래투명성 강화 - 상장경매제에 대한 비판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 건립완료 - 거래제도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논의 확대



3 산지 조직화 정책

정책과제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 유통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

다품목·소규모 생산 여건 하에서 산지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90년 이후 산지조직화는 주요 유통과제로 대두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품위 농산물을 일정규모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거래교섭력을 제고하는 것이 산지 조직화·규모화 정책의 궁극적 목적임

정책성과

작목반·공선출하회 등 농가 조직화가 진전되고, 산지유통시설(APC) 건립 확대, 산지유통조직 법인화 등을 통해 산지 단계 조직화는 진전되는 성과

농가 조직화를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작목반 공동계산, '09년 공선출하회를 통한 공동선별·공동계산·공동판매와 상품화는 농가들을 생산에만 주력하게 하고, 선별부터 판매까지 생산 이후의 과정은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조직이 책임지는 판매체계를 구축

-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의 농산물 선별·소포장, 상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연중 균일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 전문조직이 육성

산지에서 농산물을 집하·선별·가공·처리·저장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시설인 '92년 산지유통시설(APC) 건립 지원을 통해 산지유통 인프라를 확충

2000년 산지지원 자금(산지유통활성화자금사업)을 도입하여, 산지유통조직이 농가로부터 원물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유도

보완할 점

시군유통회사 등 인위적·하향식 정책을 통해 설립된 일부 산지유통조직은 실패를 거듭하는 등 시행착오를 기록

또한, 산지유통시설은 지역별 주력 품목 출하의 계절성과 작황 변동 등으로 시설 가동률 저하 및 과잉투자 우려 등이 지적

소비자는 산지가 균일한 품질이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원하지만, 산지의 지역농협과 중앙회의 소비지 판매사업간 계열화가 미흡

- 정부의 산지지원 자금과 별개로 농협중앙회의 자금이 지원되면서 교섭력 제고 등 산지 규모화·조직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

〈표 5〉 과거 정부별 산지 조직화 정책의 변화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주요 이슈	-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농업 생산구조개선	- 농협중심의 산지유통 전면개혁	- 대형유통업체 대응을 위한 산지의 규모화	-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	- 품목별전문조직 육성 - 발매기 제도화 - 작목반공동계산 추진 - 저운저장고 지원 - 수송차량 지원	- 농협의 공동출하기능 강화 -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 산지유통센터 건립 - 간이집하장, 산지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	- 농산물 브랜드 사업 본격화 -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 산지유통조직의 법인화 유도(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화) - 산지유통센터 건립 - 거점APC 건립	- 시군유통회사 설립 - 대규모농업회사 선정
주요 특징	- 농업경영체 육성 도입기 -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농업재편	- 산지유통의 종합거점으로 산지유통센터 육성 - 직거래 정책과 연계하여 농협의 산지유통에서의 역할 강화 - 지역농협 통폐합 추진 - 농가 공동계산제본격화	- 산지유통조직의 독자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 유도 - 산지조직화의 일환으로 브랜드화 사업 확대 - FTA에 대응한 과실 부문 산지조직화 추진	- 새로운 산지유통 조직의 육성 추진 - 기존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수 위주로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재편

4 수급안정 정책

정책과제

농산물은 다수 생산자가 생산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생필품으로 자유 의사결정에 따른 작목 선정,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급변, 유통구조 복잡, 유통업자의 이익 극대화, 소비패턴 변화 등의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수급안정이 어렵고, 그에 따른 가격 변동도 심하여 과거 정부부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관측센터 설치, 채소수급안정사업, 원예자조금 도입 등을 추진

- 농업관측센터는 '99년 설치하여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등의 정보를 관측·분석하여, 시장수급과 가격동향 및 예측정보를 제공
- 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은 '95년부터 도입하여 수급불안이 심한 채소류의 가격 및 농가소득안정을 도모
- 원예자조금은 2000년부터 도입하여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소비촉진,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하여 조직 규모화와 시장 교섭력 확보

정책성과

농업관측, 계약재배 확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 강화 등을 통해 가격변동을 완화

보완할 점

저장성이 낮고, 기상이변 등에 따른 생산량이 급감하는 채소류 등에서 수급불안 발생

농업인의 관측정보 활용 미흡과 수급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커 생산자단체·지자체 등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이 부족한 실정

또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의 운용 등으로 사후 수급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사전 생산단계의 수급조절에는 취약한 면이 발생

〈표 6〉 과거 정부별 수급안정 정책의 변화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수급안정사업 실시 - 농업관측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수급안정사업 실시 - 자조금제도 도입 - 유통협약·명령제 - 농업관측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사업 확대 - 농업관측정보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매비축 및 계약 재배 도입 - 소비자 가격정보 도입 - 농업관측사업 강화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주도자율적 수급안정정책 전환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단체주도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단체주도 자율적 수급안정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추파동 계기로 정부 역할 강화



5 축산물 유통 정책

정책과제

축산물은 유통 효율성 및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생산자 중심으로 조직화된 경영체 육성과 일관체계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04년 브랜드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07년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수립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지원

* 주요 브랜드 : 순한한우, 황성한우, 안성마춤한우, 개군한우 등

도축·가공·판매의 일관된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94년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 LPC)을 건립·지원

정책성과

개별 축산농가를 공동브랜드로 조직화하고, 도축·가공·판매의 일관시스템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완할 점

브랜드 경영체 및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육성했으나,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일관체계 구축에 한계

브랜드 경영체는 생산자(농가) 중심으로, 축산물 유통의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성장이 더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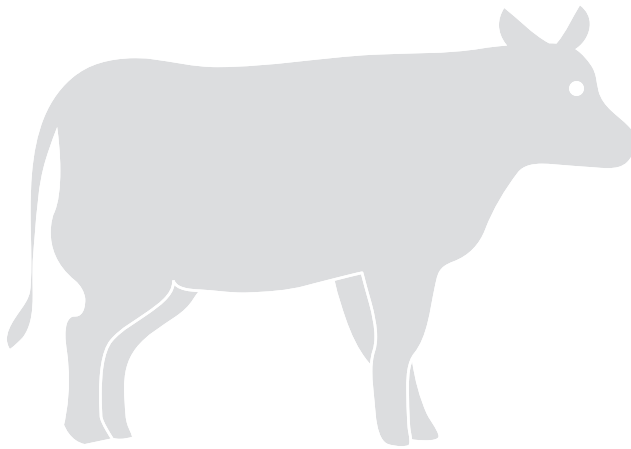
* 당초 목표 : '13년까지 축산구조를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개편('04.2월)

LPC는 시설투자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일관체계구축(가공·포장)에 필요한 역량과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 중단

* '04년 자육반출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05년 경영안정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축산물 유통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치 못하는 문제

〈표 7〉 과거 정부별 축산물 유통정책의 변화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건립 - 축산물 등급제도 도입(소·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C를 산지 유통거점으로 육성 - 도축장·가공장 HACCP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 쇠고기 포장육 등급표시 의무화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 유통체계 도입 시도 - 유통거래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의 유통단계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중심 유통효율성 제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



III

박근혜정부의 농축산물 유통정책 추진

- 1 농축산물 유통정책 구상
- 2 농축산물 유통정책 특징



1 농축산물 유통정책 구상

추진배경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역대 정부마다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과제

그간 물가지수, 품목별 관리 실명제 등 개별 품목의 가격안정에 초점을 두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 다만, 정부 개입을 통해 개별 품목의 가격안정을 유도한 인위적 처방은 시장왜곡 유발과 가격인상이라는 도미노 현상 표출
- 또한, 농산물 수입을 통한 물가안정 시도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 사로잡힘과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만을 야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특히,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격 차이가 큰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임시대응 위주의 처방보다는 구조적 대책 마련 필요

한편,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두 번째 민생현장 방문 장소가 농산물 가격 및 유통구조 개선과 연관성이 높은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일 만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큰 관심을 표현

- 대통령께서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 개선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시고, “국민들이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집행할 것”을 지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수혜자인 국민 대상으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정책에 대하여 조사하는 ‘농식품부 버킷리스트 만들기’를 ’13.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결과, 264건의 의견 중 유통구조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 중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직거래 모델 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형유통센터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와 ‘수급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 경감’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러한 결과는 농축산물 유통개선이 국민생활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격통제 등 시장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별 임시대책보다는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유통구조 전반의 틀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발굴에 집중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도 최우선적 현안 과제*로 선정되어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보건복지부), 학교폭력 대책(교육부)



추진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학계, 언론, 유통업계 등으로 유통포럼과 실무작업반 TF를 구성하고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추진

- 과거 20여 년간의 유통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발전적으로 승계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13.5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인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
-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가격 안정'을 목표로 5대 분야* 62개 세부과제를 설정 (35개 완료, 27개 추진 중)
 - * ①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②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③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④ 수급관리 체계화, ⑤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
- 대책의 내용을 현장과 공유하고 생산자(농업인)와 소비자(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주력
 - * 중부권('13.6.13), 영남권('13.6.18), 호남권('13.6.20)

대책 수립 이후에는 분야별로 대책의 주요 과제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개선·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 합동평가팀을 구성하여 심층평가 추진('13.7~12월)

- *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국정과제 심층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다만, 대책 시행 초기이고 지속 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정량적 평가보다는 합목적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평가 추진



종합대책에 대한 민관 합동의 심층평가, 유통포럼 등을 활용한 대책 추진상황 및 개선·보완 방안 논의 등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실시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시행 1주년인 '14.5월 그간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보완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 보완대책에서는 정책의 연속성 유지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 기존 대책의 개선·강화를 위해 21개 세부과제를 신규 추가(13개 완료, 8개 추진 중)
- * ①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정가수의매 확대, 물류효율화), ② 직거래 확대(생산자·소비자 접근성 제고), ③ 생산자단체 계열화(농협산지 역할 및 도매기능 강화), ④ 수급관리 체계화(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농축산물 유통정책 구상

추진 전략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은 적정하게 생산된 농축산물을 수집하는 산지단계에서부터 전국의 소비지로 이동하여 소비자에게 분산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 가능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농축산물 유통문제를 농정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유통경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정책 방향을 설정

- 특히, 기존의 부분적 접근 대신 산지, 도소매, 소비지 등 유통 전 과정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추진
- 무엇보다 그간 도매시장 중심의 공정성 위주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경로간 경쟁을 통한 높은 유통비용 감축 등 효율성 강조

- 기상이변 등 공급 충격에 취약한 농축산물의 기본 특성 외에도 도매시장 경매제가 가진 내재적 한계, 주요 품목의 수급관리 미흡 등으로 가격 변동이 확대되는 문제와 산지-소비지가격의 비연동 문제 해소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

박근혜정부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과거 20여 년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토대로 '생산자는 제 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

-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높은 유통비용과 큰 가격변동'을 줄이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실천적 계획 수립

결국, 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아닌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과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계열화 확대로 유통과정의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에서 수요자인 소비자의 참여를 강조

- 생산자 이익 보호 등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에 중점을 두어왔던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성 추구하고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
- 아울러, 정부 주도 시장개입 정책에서 민·관 협치로 정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 추진



핵심내용

① 직거래 등 대안유통경로 확충

△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직거래 수단 확대를 통해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효율성 제고

* '13년도 4% 수준인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16년까지 10%로 확대

직매장 생산지와 인근 소비지간의 로컬푸드 형태의 직매장* 활성화

- *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역 농가들을 조직화하여 하나의 오프라인 공간에 모아놓은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 로컬푸드 직매장 확산을 위해 신규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초기 부담 해소
 - * 지난 3년간 총 82개소 지원('13 : 23개소, '14 : 29, '15 : 30)
- 로컬푸드 직매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가칭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

직거래장터 소비자 중심의 직거래 장터 활성화

- 농산물 정례 직거래 장터의 확대를 위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비·홍보비 등 지원
 - * 지난 3년간 총 96개소 지원('13 : 31개소, '14 : 30, '15 : 35)
- 직거래 장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형차량 지원
- 직거래 장터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광지형·주산지품목특화형·상생형·일반형의 4가지로 유형화

온라인 직거래 ICT를 활용한 온라인 新유통경로 확대

- POS단말기를 활용한 농산물 B2B 직거래 시스템 'Pos-Mall' 신규 구축
 - * 슈퍼마켓·중소식당 등 영세상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POS단말기 상에 온라인 B2B 마켓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유도
- 생산자·소비자·큐레이터(중개인)가 낮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 구축
 - * 판매수수료가 약 12%로 낮은 수준이며, 누구나 '큐레이터'가 되어 농산물 온라인 거래에 참여 가능
- 23%의 낮은 수수료율*과 전체 방송의 50% 배정으로 농산물의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는 농축수산물·중기제품 전용 공영TV홈쇼핑 개국('15.7월)
 - * 기존 홈쇼핑 평균수수료 수준인 34%보다 약 11%p 저렴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5.6월)
- 직거래의 개념 및 정부·지자체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신뢰제고 기반 마련

생산자·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직거래 컨테스트를 실시하여 직거래 유형별 우수 사업모델 선정
 - * 총 3회 실시('13~'15),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온라인 등 분야별 총 36개 우수사업자 선정 및 마케팅 지원
- 수도권 등지에서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수단에 대한 소비자 체험 기회 제공
 - * 총 3회 실시('13~'15), 83개 직거래 사업자가 참여하였고, 약 1만 6천여 명의 소비자가 방문(제1회 6,073명, 제2회 6,500명, 제3회 3,9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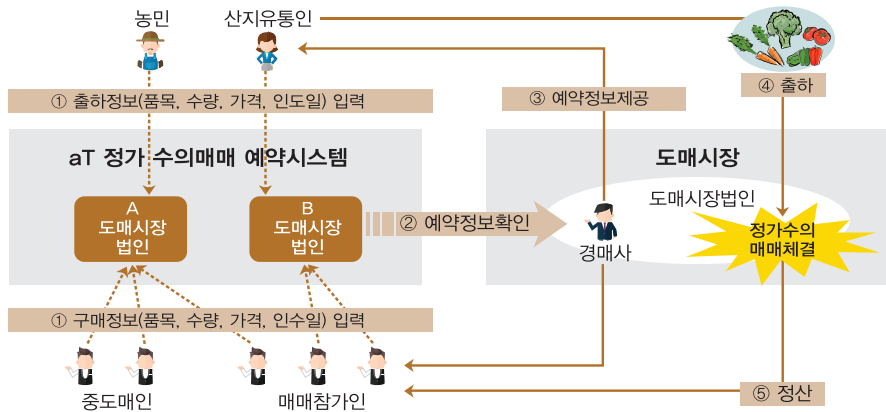
②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 급변하는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거래단위를 규모화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가·수의매매' 거래 활성화 추진

* 정가수의매매 비중 : '12: 8.9 → '16: 20%

정가·수의매매 '12.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허용하고, 목표치 설정

- 기존의 경매 중심 거래관행을 극복하고 거래방식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각종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 '14.10월 「농안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경우 시장사용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시설사용료를 무료로 감면(5% →0)
 - 또한,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저금리(1.5%) 정책 자금('13년 700억, '14년 420억, '15년 470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산지·도매시장간 쌍방향 정보를 공유하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격정보를 받아보고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모바일 예약거래시스템(www.agromarket.kr) 구축('15.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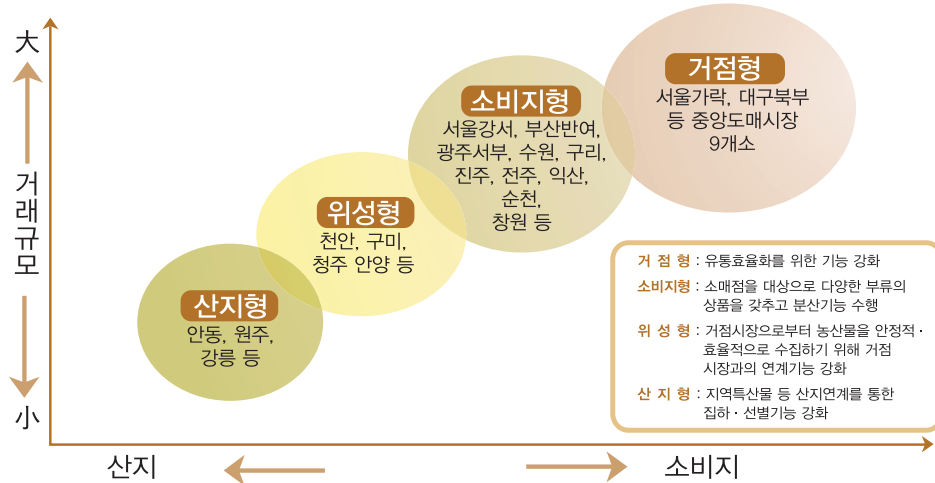
〈그림 3〉 모바일 예약거래시스템 거래 구조도

규제완화 유통 주체 간 엄격한 역할 분담에 기반한 공정성 중심도매시장 관리에서 벗어나 규제완화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운영 패러다임 전환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유통 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마트 등 외부주체와 상호 경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지되었던 중도매인 간 거래를 제한적 허용('14.10월) 함으로써 소매점(슈퍼마켓 등)의 one-stop 쇼핑을 지원
 -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물류까지로 확대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매수를 허용하는 등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 기능 재정비와 연계하여 기능별*(거점·산지·소비·위성형) 차별화된 발전 방향 제시

* (위성형) 물류기능 중심, (산지형) 집하·선별기능 강화, (거점형) 규모화된 도매거래 강화, (소비비형) 도·소매 복합의 종합도매시장화



〈그림 4〉 도매시장 기능별 발전방향

시설현대화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통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도매시장에서도 소비패턴 다양화 등 급변하는 소비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유형별 맞춤형 추진 전략’ 수립으로 중앙·지방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단순한 시설 개보수가 아닌 물류관점*에 입각한 시설현대화 추진

* 경영컨설팅(MD조사) 실시 의무화, 원스톱쇼핑 지원, 소포장·전처리 시설 확충, 저온유통체계 (cold-chain system) 구축, 물류비 절감시스템 도입 등

③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확대

△ 산지유통시설, 도매물류센터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 연계 추진

* 생산자단체 시장점유율 : (도매) '12 : 28% → '16 : 36, (소매) '12 : 12% → '16 : 20

산지조직 산지조직화, 계통출하 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의 산지 유통 점유비율 확대 추진

- 시군단위의 광역화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공동마케팅조직을 산지 핵심 유통조직으로 육성
* 조공법인 육성목표 : ('12) 28개소 → ('13) 36 → ('16) 42
- 산지유통종합센터(APC)가 규모화된 산지유통의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가동률 제고 추진
 - 산지유통종합센터의 통폐합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운영효율화

〈표 8〉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 개요

사업내용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건립·보완 지원
사업규모	'17년까지 산지유통시설 400개소 건립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C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설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과수거점APC : (일반)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공공) 국고 50%, 지방비 50%

- 산지지원 자금은 조합별 자금한도, 지원조합 사업의무액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농협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체계 구축

산지유통종합자금 사업 개편 내용

통합마케팅조직을 산지 유통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

- 개별조직의 경우 '15년도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금리 3%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16년부터는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

'품목광역조직'을 도입하여 통합조직과 동등한 자격 부여

- 2개 시·군 또는 시·도 이상에서 원물 확보 조직(취급액 100억 이상, 조직화 취급액 70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품목개별조직에 대해 지원

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취급액 연차별 확대

- 생산은 참여조직이 하고, 판매는 통합조직으로 추진함에 따라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한 농산물 출하를 확대하는 등 통합마케팅조직 역할 강화
 - 참여조직의 취급액 확대 : ('15) 10% 이상 → ('17) 50 → ('19) 90

APC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기간 및 금리 차등 구간 개선

- 지원기간 : (기존) 1~3년 → (개선) 3
- 시중금리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 차등 구간 변경

금리	기존	개선	비고
1%	20% 이하	30% 이하	저금리 수혜자 확대
2%	20%~50%미만	30%~80%미만	2% 금리 수혜자 확대
3%	50%~100%	80%~100%	고금리 사업자 축소

지원한도액 및 우수인센티브 지원 확대

- 우수조직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원한도 및 통합조직 인센티브 강화
 - 개소 당 지원한도액 : (기존) 500억원 → (개선) 600
 - 통합조직간 통합 인센티브 : (기존) 100억원 → (개선) 200

도매물류

산지과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는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

-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판매역할을 강화**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전속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조직도 육성
 - * 안성('13.9월 가동), 밀양('15.9월 가동)
 - ** 도매 사업목표 : ('12) 9,596억원 (점유비중 7%) → ('16) 19,320 (14%)
- 농협 조합마트를 체인화하여 도매물류센터에서 조합마트 청과 공급비중을 확대

패커

축산물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확립

- 농협(안심축산)을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Packer)로 육성하여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
 - * 협동조합형 패커 : 수집상, 도축장, 도매상으로 분리된 축산물의 수집·도축·가공·판매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협동조합



④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 수급관리 체계화

△ 주요 수급 불안품목에 대해 참여·합의에 의한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및 가격안정대 설정으로 수급관리 강화

수급조절위원회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학계 및 정부 등 수급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13년부터 새롭게 구성·운영하여 수급상황 등을 공유하고,
- 농안법 개정을 통해 수급조절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3년에는 총 8회, 농산물 가격이 특히 낮았던 '14년에는 13회의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와 합의를 통한 수급대책 추진의 의사결정기구로써 자리매김
 - '14.3월, '13년산 저장양파 재고과다 및 '14년산 생산량 증가로 공급과잉이 예상되어 ‘심각경보’를 발령하여 시장격리 62천톤, 가공 확대 3천톤, 소비촉진 18천톤 등을 추진하여 수급을 안정하였고,
 - '15.6월, 고온·가뭄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양파는 ‘경계경보’를, 7월에는 ‘심각경보’를 발령하여 계약재배 출하조절 34천톤, TRQ 도입(조기도입 2천톤, 증량 140천톤)하였고, 농협 하나로클럽·마트 등을 통한 할인판매 행사 등 소비촉진 추진
 - '15.7월,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도 ‘경계경보’를 발령하여 계약재배 출하조절 2천톤, TRQ 도입(조기도입 13천톤, 증량 41천톤), 비축물량 방출 2천톤 등을 추진

수급조절매뉴얼

시장 개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수급이 불안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상승·하락의 경우에 대해 주의, 경계, 심각단계 등 3단계 구간을 설정하여 운영
- 수급조절매뉴얼은 최근 5년간 도매가격 등의 자료를 반영, 주기적 개정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14.11월, 양념채소의 매뉴얼 개정 시 최근 수급여건을 반영한 기준가격 조정과 산지가격 하락 시에도 경보발령이 가능토록 발동기준을 다각화하였고, 공급 과잉 시 무상기증 근거 마련
 - '15.7월, 배추·무 하락 심각단계의 가격기준을 경영비 + 출하비 수준에서 직접생산비(경영비+자가노력비) + 출하비 수준으로 상향하여 최소한의 농가 생산비를 보장하였고,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필요성으로 배추의 ‘하락주의’ 구간 신설

농업관측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 등을 위한 농업관측 추진

-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예측정보 제공
 - * '99.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에 '농업관측센터' 신설
-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유통·가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종합적인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산물 거래와 소비 유도
 - 무, 배추 등 35개 품목의 단기(1~2개월 단위) 관측, 중기 관측(분기단위) 및 장기관측(10년단위, 매년 1월) 등 정보 제공
- 관측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측시스템 개선
 - 정확도 향상을 위해 표본 농가수 확대(16천명 → 19, '14.), 단수예측·중기선행관측 모형 개발 및 산지기동반 운영(고랭지·겨울배추, '14) 및 관측센터와 유관기관 간 생육, 가격 등 수급정보 공유 강화
 - 농진청(생육상황 등), 농관원(경영체정보 등), 농협·aT(계약재배, 비축자료 등)
 - 관측정보 제공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관측월보(184천부), 문자·모바일앱·이메일·SNS 등(76천명)을 활용하여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
 - 농업전망대회 권역별 개최(2,8천명, '15.2), 농업인 교육에 관측과목 신설(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및 채소류 주산지 현장설명회 추진('14~'15) 등을 통해 농업인·유통인들의 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병행 추진
 - 관측정보 수요자 대상 조사결과 이용률은 94%, 만족도 70%(KREI, '14), 주요 품목의 가격 예측 정확도 90% 이상 기록

계약재배·비축 수급안정 실효성 증대를 위한 계약재배·비축 추진

- 배추 등 수급불안이 상시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2년 12% 수준의 계약재배 비중을 '15년에는 22%, '17년 30%까지 확대할 계획
 - * 채소계약재배사업 운용규모('15) : 9,617억원(8개 품목 1,217천톤)

- 배추 등 수급불안이 상시 발생하는 품목 중심의 계약재배사업을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15.3) 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
 - 사전 생산단계 수급조절의 취약한 면을 보강하고자,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하여 무·배추 등 가격 등락이 심한 품목의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평년가격의 80%)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 주산지 중심의 생육단계 면적조절을 강화
 - * ('15) :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 ('20) :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 도매시장으로의 홍수 출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거래·수급조절·시장출하형 등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지원을 차별화하여 농협 외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 실수요처와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출하안정제를 도입·시행('16 : 고랭지·겨울배추, 양파)할 계획

- 국내산 농산물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 운용
 - 수매비축은 수급불안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 우선수매 등을 통해 정책 간 연계성 강화하고, 정부보유물량은 가격하락 우려 시 제한적 용도(기부 등)로만 방출
 - * 비축규모('15) : 6개 품목 54천톤(1,702억원)
 - 수입비축은 절대 부족 품목의 사전 적기 도입으로 조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그외 품목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운용 및 증량 최소화
 - * TRQ(양파/마늘) : ('12) 50.0천톤/13.2천톤 → ('13) 44.3/2.0 → ('14) -/0.8



2 농축산물 유통정책 특징

〈표 9〉 과거 정부와 박근혜정부간 분야별 유통정책 비교

분 야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위주, 행사 성격의 직거래 장터 등에 집중 • 농가 개인 홈페이지를 수단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제도화 • IT 기반 등 새로운 직거래모델 확산 * POS-Mail, 이웃농촌 등
도매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32개) 건립('79~'08) 완료로 농가 출하권 보장 •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경매위주 거래제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제도 및 물류개선을 통한 비용 감축 및 경쟁력 강화 • 가격진폭완화를 위해 정가·수의거래 확대(경매제 보완)
산지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시설 확충 • 공동마케팅 주체육성(조공법인, 시군유통회사, 대형 브랜드 경영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조직화 핵심정책으로 계열화 추진 및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 전국 단위 조직화 추진
수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 계약재배, 유통협약·명령, 자조금 도입 (생산자단체 중심) • 배추파동을 계기로 정부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강화,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 체계화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품목별 수급조절매뉴얼 마련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대 등 경쟁 촉진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

정부 주도의 직거래 장터, 전자상거래 확대 등 단일 경로를 중심으로 활성화 및 제도개선에 집중

- 농가소득 향상, 유통단계 감축을 주된 목표로 설정

박근혜정부는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新유통경로를 발굴·육성하여 경쟁을 촉진

-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사이버거래소, POS-mall, 이웃농촌, 공영홈쇼핑 등 대안 유통경로를 지속적으로 개발
- 민간 주도의 자율적·창의적 직거래 활성화 방식

생산자 중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고려

이전 정부는 생산자가 직거래 장터, 개인 홈페이지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직거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중심 추진

박근혜정부에서는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참여형직거래 사업 강화

- 소비자 교류행사, 산지 공동거래, 직거래 콘테스트·페스티벌, 직거래 신유형 공모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 가능한 사업 추진
- * 생협, 꾸러미 등 소비자-생산자 연대형 공동체지원농업(CSA) 지원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수단 확대

농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별 농산물 쇼핑몰 구축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자가 B2B 거래, TV 홈쇼핑 등 다양한 거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확대 지원

- 외식·가공업체·소상공인 등이 온라인을 통해 B2B 거래에 손쉽게 접근 가능한 '포스몰' 구축
- 생산자·소비자·큐레이터(중개인)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 구축
- 농산물 전용 TV홈쇼핑 채널 '공영홈쇼핑' 설립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거래안정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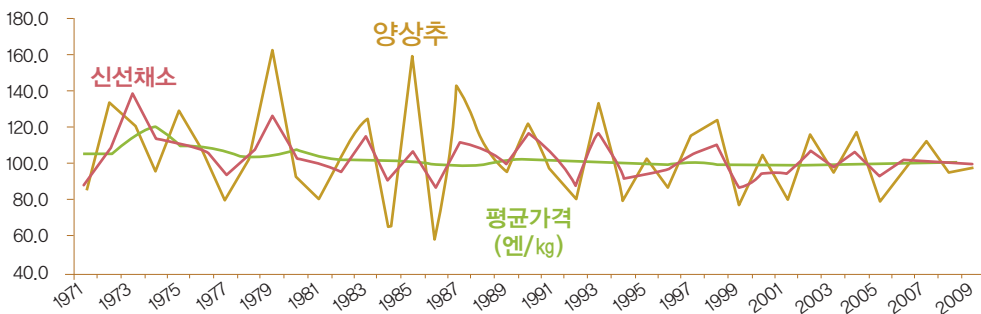
이전 정부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정가·수의매매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 유통주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경매는 소규모 출하자 보호에 장점이 있으나 단기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가격 급등락을 확대한다는 한계 극복

* '10년 배추파동 당시 배추 도매가격은 하루만에 전일 대비 54.4% 급등하고 다음날 35.5% 급락 (가락도매 시장 경락가격, 배추 상품)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신선채소의 가격 변동폭 완화

- 정가·수의매매가 거래 원칙이 된 '99년 이후 등락폭 지속 축소



중앙도매시장 경매비중	1973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82.8%	76.4	74.3	64.8	55.1	34.3	24.9	17.1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그림 5〉 일본의 정가·수의매매 도입후 신선채소 가격 안정화 사례

시설현대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제고

단순한 리모델링 위주의 시설 개보수를 지양하고 시설현대화를 시장 활성화로 유도하기 위한 경영혁신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 시장의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설계와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도매시장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물류관점에 입각한 시설현대화 추진
- 또한, 지방도매시장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매시장을 유형별로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발전 추구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출하자 이익을 보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완화를 통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출하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유도

- 도매시장 중사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산지유통인·대형유통업체 등 도매시장 외부 유통중사자와의 상호 건전한 경쟁 촉진

산지 유통주체 중심의 계열화·조직화

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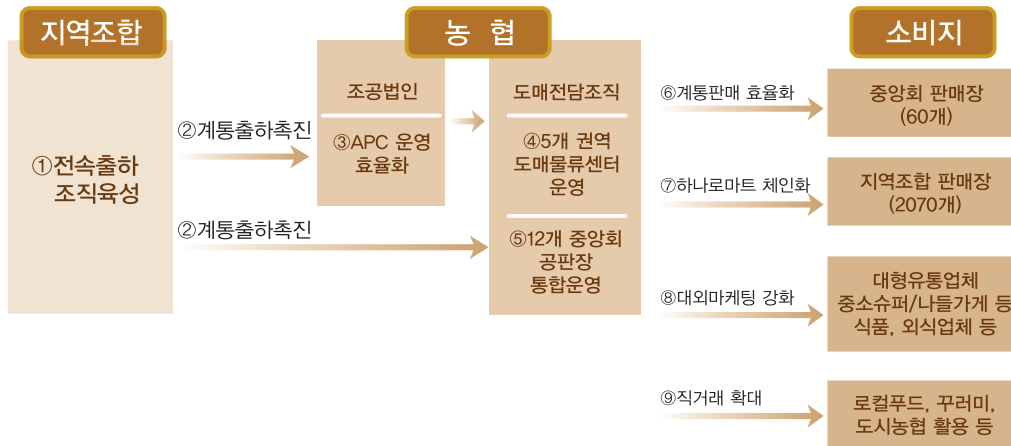
① 산지유통·도매·소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 추진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 보완 및 개선에서 벗어나 산지유통종합센터, 물류센터 등을 통해 산지와 소매를 연계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산지 교섭력 제고

② 책임분담 및 협업을 통한 산지 규모화 · 조직화 추진

참여조직은 농가 조직화 및 통합조직에 원물 공급, 통합조직은 출하·거래교섭권을 위임받아 마케팅을 전담함으로써 위험부담 감소 및 산지교섭력 제고

- 정부와 농협간 산지지원자금 통합 운영을 통해 산지조직 육성 시너지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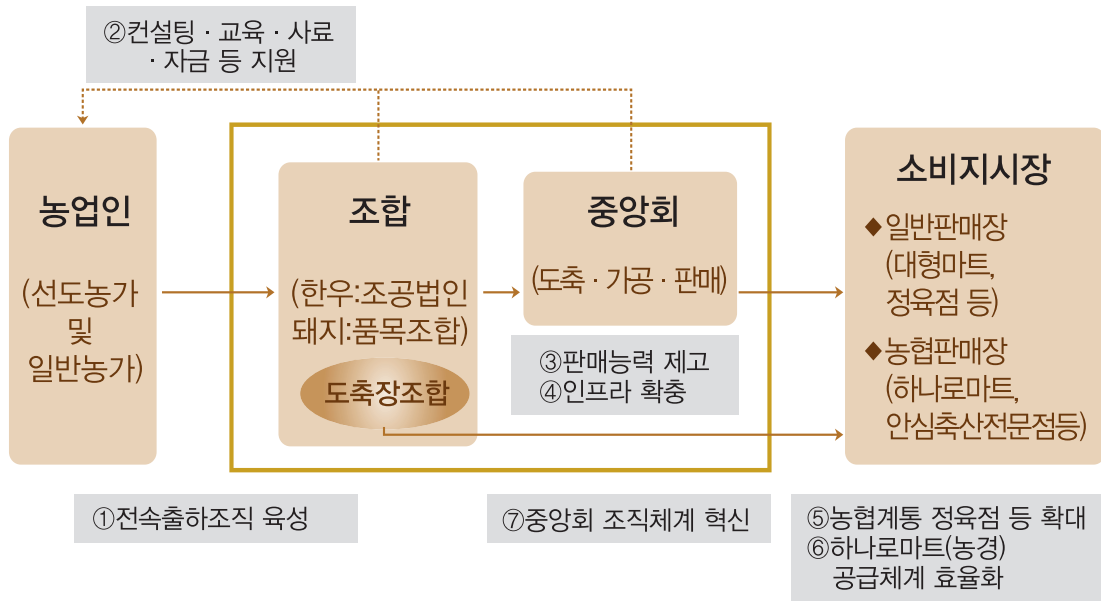
〈그림 6〉 농협 유통계열화 추진방향

축산물

① 도축 · 가공 · 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과거 생산자 중심의 브랜드 경영체로는 일관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어, 도축·가공·판매 인프라*를 갖춘 농협(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로 육성하여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

* 도축장 5개소(중앙회 공판장 4개소 포함), 조합 식육가공장



〈그림 7〉 축산물 유통계열화 추진방향

② 산지-소비지 가격연동성 제고

축산물 소매업체는 원료가격 상승분은 제때 반영하지만, 가격하락시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하거나 반영폭을 줄여 이윤 추가 경향

-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계열 정육점/정육식당 확대 개설

* 소매판매점의 경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려, 가격선도 수준까지만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

③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축산물은 부위별 선호도 편차에 따라 비선호 부위 재고부담이 선호부위 가격으로 전가되는 문제 해결 필요

- 비선호 부위 소비를 선도하기 위해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축산물 수급안정

자율과 합의의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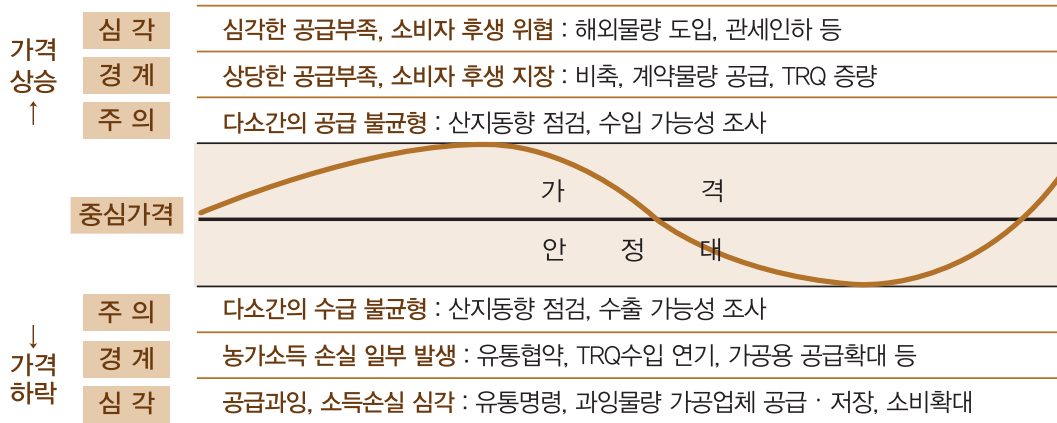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 중심에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급조절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합의에 기반해 투명한 수급안정대책 추진

- 수급조절위원회는 품목별 수급상황 분석, 수급안정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 구성(20명) : 생산자대표 7, 소비자·유통업체 대표 4, 학계·연구기관 4, 정부 5
 - *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 ('13) 8회 → ('14) 13회 → ('15) 8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과거 정부주도의 수급정책 추진에서 시장가격 및 가격안정대를 기초로, 단계별 정책수단을 매뉴얼화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수급안정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대응

- * 품목별 최근 실제가격(5년간 도매가격) 변동률을 기초로 가격안정대 설정



〈그림 8〉 가격안정대 및 수급조절매뉴얼

* 수급이 불안한 5대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의 상승·하락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조치사항(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

** 가격안정대는 가격 등락이 있어도 안정대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의미

시장 중심의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과거 정부에서는 수급불안 시 수매비축 등의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계약재배사업 확대 및 TRQ·할당관세 등을 최소화하는 등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 아울러 TRQ·할당관세 등 단기 효과 위주의 임시처방적 조치는 자제하고, 수급조절매뉴얼 등을 통해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TRQ(양파/미늘): ('11) 17.6천톤/26.5 → ('12) 50.0/13.2 → ('13) 44.3/2.0 → ('14) -/0.8

* 할당관세 운용 품목(전체품목/물가관련): ('12) 65품목/35 → ('13) 41/13 → ('14) 36/8

- 이와 함께 수입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산 비축 확대를 통해 단기 수급불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 국산 비축물량을 활용, 가격급등 방지 및 불필요한 수입 최소화

〈참고〉 과거 정부와 박근혜정부 분야별 유통정책 및 특징 비교

〈표 10〉 과거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직거래 정책 및 특징 비교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박근혜 정부 (2013 ~ 2017)
목적	판로 확대	유통효율	도농교류	유통효율	유통효율
직거래 범위	협의	최(最) 광의 (대형유통업체 포함)	협의	광의	협의
정책 관점	대외개방에 대비한 농가 지원 수단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핵심 수단	도농교류의 수단	유통구조개선의 보완대책으로 추진	유통단계 축소 및 경로간 경쟁촉진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장터 설립지원 - 생산자단체의 유통 자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의 역할 강화 - 직거래 장터 확대 - 산지와 대형유통업체간 직거래 개시 - 전자상거래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1촌'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B2B를 위한 '사이버 거래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등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 정기상설화 추진 -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B2B시장 지속 확대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농협 중심의 도시 직판장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과제로 추진 - 직거래 범위를 도매 시장외 거래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 정책·논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는 유통효율 중심의 직거래 추진 - 민간에서는 도농신뢰 개념의 직거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제도화 - 경로다원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경쟁 촉진 - IT 기반 등 새로운 직거래 모델 확산 - 소비자참여 중시

〈표 11〉 과거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도매시장 정책 및 특징 비교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박근혜 정부 (2013 ~ 2017)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 조기 건설 - 전품목상장거래 실시 - 최저가격 제시제도 도입 - 도매시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 건설 확대 - 상장예외제도 활용 - 전자경매도입 - 도매시장평가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도매인제 도입 (강서도매시장 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 - 정가·수의 매매 제도 도입('12.8. 농안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확대 실시 - 정가수의매매 확대 - 최소출하단위 설정 - 대금정산조직 설립 - 하역개선 등 물류효율화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경매제 정착 - 농안법파동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경매를 통한 거래투명성 강화 - 상장경매제에 대한 비판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 건립 완료 - 거래제도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논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제도 및 물류 개선을 통한 비용 감축 및 경쟁력 강화



〈표 12〉 과거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산지 조직화 정책 및 특징 비교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박근혜 정부 (2013 ~ 2017)
주요 이슈	- 대외개방에 대비한 농업생산 구조개선	- 농협중심의 산지유통 전면개혁	- 대형유통업체 대응을 위한 산지의 규모화	-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	- 생산자단체(농협, 법인) 유통계열화를 통한 광역단위 경쟁력 확보
주요 정책	- 품목별전문조직 육성 - 발매기 제도화 - 작목반공동계산 추진 - 저온저장고 지원 - 수송차량 지원	- 농협의 공동출하 기능 강화 -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 산지유통센터 건립 - 간이집하장과 산지 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	- 브랜드 사업 본격화 - 55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 산지유통조직 법인화 유도 (조합공동사업 법인 제도화) - 산지유통센터 건립 - 거점APC 건립	- 시군유통회사 설립 - 대규모농업회사 선정	- 생산자단체 유통 계열화 촉진 - 권역별 5개 농협도매 물류센터 개설 - 법인 인수 합병 등 규모화 추진
주요 특징	- 농업경영체 육성의 도입기 - 대외개방에 대비 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체 중심 으로 농업재편	- 산지유통의 종합거점 으로 산지유통센터 육성 - 직거래 정책과 연계 하여 농협의 산지 유통에서의 역할 강화 - 지역농협 통합 추진 - 공동계산제의 본격화	- 산지유통조직의 독자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 유도 - 산지조직화의 일환으로 브랜드화 사업 확대 - FTA에 대응한 과실 부문 산지조직화 추진	- 새로운 산지 유통조직의 육성 추진 - 기존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수 위주로지원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재편	- 산지조직화 핵심정책 으로 계열화 선정 - 계열화의 주체인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 소지역 단위에서 벗어나 전국단위의 조직화 추진

〈표 13〉 과거 정부와 박근혜정부 수급안정 정책 및 특징 비교

구분	김영삼 정부 (1993 ~ 1997)	김대중 정부 (1998 ~ 2002)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이명박 정부 (2008 ~ 2012)	박근혜 정부 (2013 ~ 2017)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수급안정사업 실시 - 농업관측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수급안정사업 실시 - 자조금제도 도입 - 유통협약·명령제 도입 - 농업관측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사업 확대 - 농업관측정보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매비축 및 계약재배 도입 - 소비자 가격정보 도입 - 농업관측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관리 체계화 :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품목별 수급조절 메뉴얼화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단체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 정책으로 전환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단체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단체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추파동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강화 - 단, 가격급등락 시에는 정부 개입



IV

박근혜정부 농축산물 유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1 정책 성과
- 2 향후 과제



1 정책 성과

직거래 등을 통한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로컬푸드 직매장 등 확대를 통해 생산자·소비자 체감만족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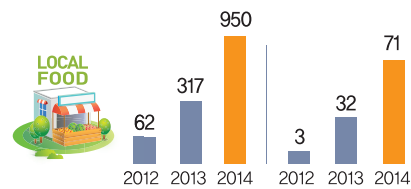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수 및 시장규모 지속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수는 '12년 3개에서 '15.11월 기준 103개소로 34배 증가하였으며, 직매장 총 매출액은 '12년 62억에서 '15.11월 1,513억원으로 24배 증가
-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수 또한 '12년 1,745호에서 '15.11월 1만 6,510호로 꾸준히 증가
* ('12) 1,745농가 → ('13) 5,846 → ('14) 12,775 → ('15.11) 16,510

〈표 14〉 직매장 개소 수 및 매출액

구 분	2012	2013	2014	2015.11.
개소수(개소)	3	32	71	103
총 매출액(억원)	62	317	950	1,513
총 참여농가 수 (개소)	1,745	5,846	12,775	16,510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억원)/개소수(개소)



〈그림 9〉 '12~'14년 직매장 시장규모 증가 추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

-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가 수취율은 일반마트 대비 약 17.2% 높고, 소비자 가격은 약 20%까지 저렴
- 생산자 판매가격 상승, 소비자 실 구매가격 하락으로 양쪽 모두의 경제적 이익 증가

유통단계 축소로 농축산물 유통비용 절감

- 新유통경로 거래액은 '14년 63,725억원에서 '15년 74,050억원까지 확대 전망 (전체 농림업생산액 대비 16.3%)
- '15년 유통비용 절감액은 총 7,491억원 추정으로 우리나라 가구당으로 환산할 경우 40,048원/가구의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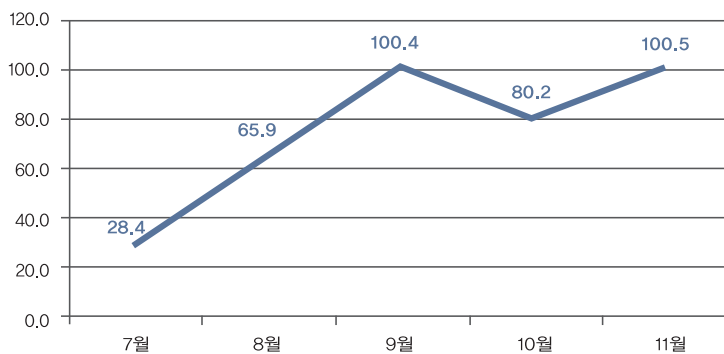
직거래 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 체감만족도 상승

-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정책에 대해 실시한 정책 체감도 조사('15.6월, 문체부) 결과, 생산자·소비자 만족도가 모두 향상
 - * 소비자 만족도 상승 : ('14) 3.74점 → ('15) 3.83 (5점만점)
 - * 생산자 만족도 상승 : ('14) 4.01점 → ('15) 4.10 (5점만점)
 - * 직거래정책이 도움이 된다 : 생산자 95.2%, 소비자 88.1%

공영홈쇼핑을 통한 농식품 직거래 확대 및 수급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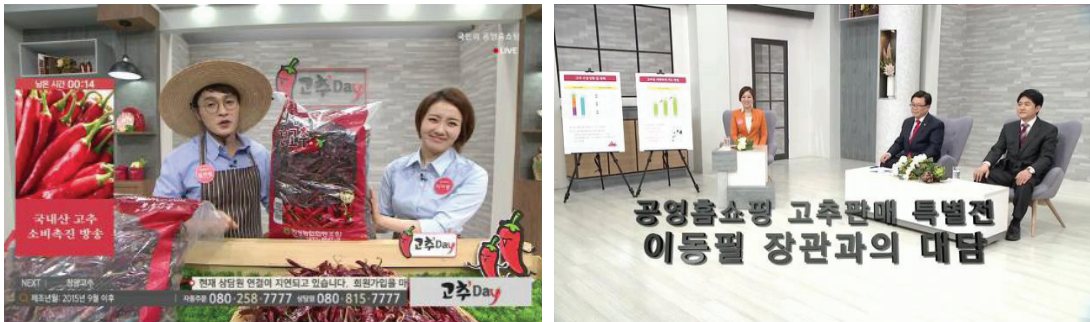
공영홈쇼핑 농축산물 판매 지속 확대

- '15.7월 개국 이후 농축산식품 총 509억원 판매(농축수산물 편성비율 절반수준 유지, 48.2%)
 - * NS홈쇼핑 개국 첫해('01.9~12) 판매규모는 249억원
 - (사례1, 고창 복분자) 복분자 수확시기인 6~7월에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농가 피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영홈쇼핑을 통해 복분자즙 등 1억 5천만원*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여
 - * ○○농협 연간 취급액(10억원)의 15%를 판매하는 성과
- 월별 농식품 판매액은 증가 추세(월 평균증가율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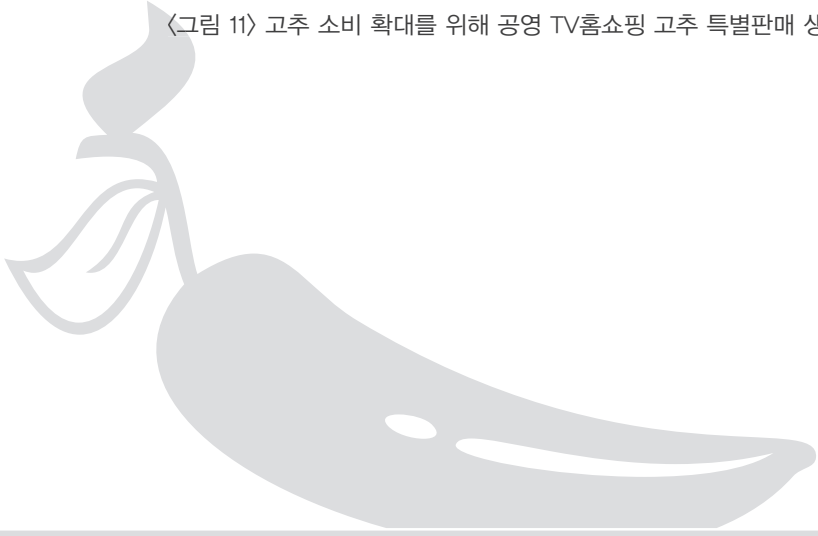


〈그림 10〉 2015년 공영 TV홈쇼핑 농축수산물 판매액 추이(억원)

- (사례2. 국산 건고추) '15년도 공급 과잉상태에 직면한 국산 건고추에 대해 공영홈쇼핑 특가* 판매(고추 DAY)를 추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
 - * 가격(3kg) : 고추(판매가 37천원, 소매가 53), 고춧가루(판매가 51천원, 소매가 71)
- 지역별 건고추(고춧가루) 상품을 홈쇼핑 최초로 TV홈쇼핑에 하루 8시간 집중 편성하여 총 33톤(회당 1,355세트), 약 5억원 판매
- 이는 일반 건고추·고춧가루 판매방송 판매량(회당 320세트)의 약 4.2배 규모이며, 당시 건고추 공판장(서안동 농협) 일일 평균 출하물량 약 11톤의 3배에 해당
- 방송 후, 임실 건고추(가루) 롯데마트 공급계약 체결 등 연계효과 발생(초도 3톤을 시작으로 약 100여개 매장에 공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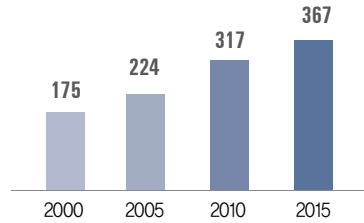
〈그림 11〉 고추 소비 확대를 위해 공영 TV홈쇼핑 고추 특별판매 생방송 추진('15.11.5)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확대

산지유통시설의 양적·질적 성장세 확대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산지유통시설(APC)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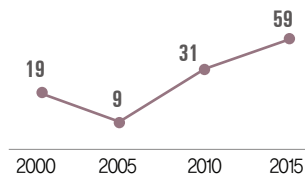


〈그림 12〉 산지유통시설 수(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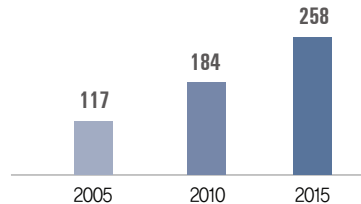
* 산지유통시설 수(누계) : ('00) 175개소 → ('05) 224 → ('10) 317 → ('15) 367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산지의 거래교섭력 제고 기여

-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수 : ('00) 19개소 → ('05) 9 → ('10) 31 → ('15) 59
-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 평균 취급액 : ('05) 117억원 → ('10) 184 → ('15) 258
-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 평균 조직화취급액 : ('05) 21억원 → ('10) 48 → ('15) 145



〈그림 13〉 조직화 취급액(개소)



〈그림 14〉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 평균 취급액(억원)

시·군단위 이상의 광역화된 통합마케팅조직(조공법인, 연합 사업단)이 핵심 산지유통주체로 성장

통합마케팅조직 수('12 : 45개소 → '15 : 88개소), 계열화 취급액('14 : 7조 5932억원) 등 통합 마케팅체계가 크게 성장

- * 통합조직 취급액 2조2,683억원(258억원/88개)
- * 통합마케팅조직 88개소/ 참여조직 498개소('15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기준)
- * 원예조공법인 수/ 평균 매출액 : ('12) 29개소/274억원 → ('15) 47/335(p)

참여조직과 통합마케팅 조직간 품질관리 및 상품화 등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산지경쟁력 확보

통합조직은 출하·거래교섭권을 위임받아 마케팅을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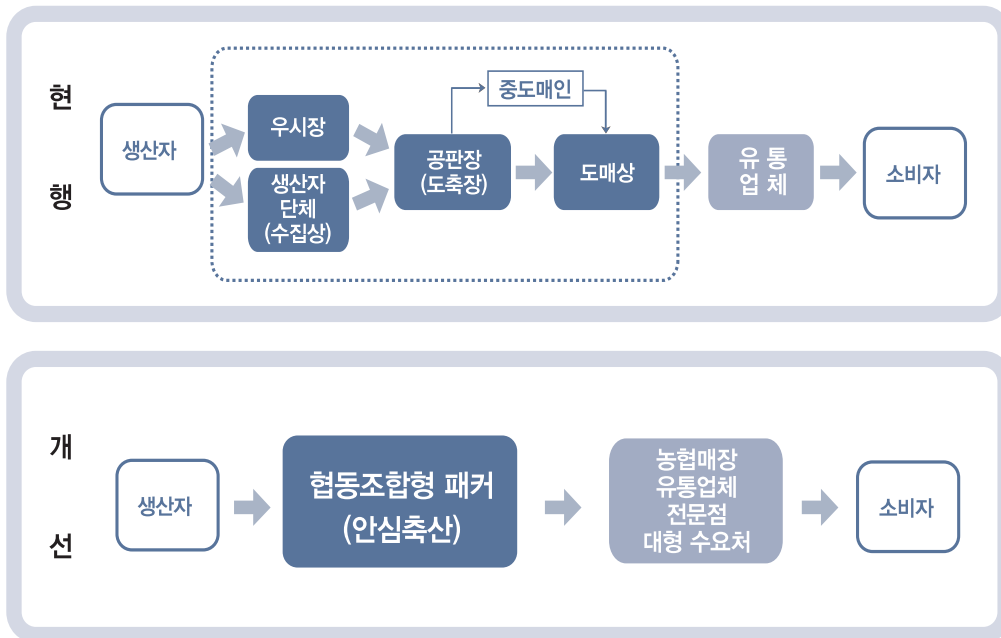
- * 자격요건 : 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2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20% 이상
- * 참여조직 취급액 5조3,249억원(107억원/498개)

참여조직은 능가 조직화 지원 및 통합조직에 원물 공급 역할

- * 자격요건 : ('12) 통합마케팅 협약 → ('13~'14) : 공동계산액 3억원 이상 출하 → ('15) 총취급액 중 10% 이상 통합조직에 출하 → ('16) 30% 이상 출하

패커 육성으로 축산물 유통계열화

도축·가공·판매를 일관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및 시장점유율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유도



〈그림 15〉 축산물 유통단계 변화(5~6단계→3~4단계)

- 계통출하 기반 확대를 위한 핵심선도농가 육성 및 농협(안심축산, 품목조합 등) 출하를 통해 패커 판매비중 증가

* 축산 선도농가 육성 : ('13) 3,650 → ('14) 4,149 → ('15) 4,986

* 패커 판매비중(소/돼지) : ('13) 19.2%/9.7% → ('14) 24.9/16.9 → ('15) 28.7/17.9

- 생산자단체 중심의 도축·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거점도축장**을 선정, 집중 육성

* 기존 공판장(음성, 나주) 증설('16~'17), 부경공판장 통폐합('15~'18), 부천 축산물 복합단지 건립('15~'18)

** 기존 도축업체 중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패커, Packer)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곳으로, 현재 4차에 걸쳐 13개소 선정

- 축산물 온라인 도매 유통채널 개척(안심축산 e-고기장터)

·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의 장점을 접목한 IT융합형 신 유통채널

* 추진실적(매출액/구매회원) : ('14) 33억원/747개소 → ('15) 79/1,303

·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 실시간 거래, 쌍방향 거래로 중간거품 제거

* 예) '15.8.11 도매가격(등심1+) : e-고기장터 65~68천원, 온라인(민간) 70~76천원

산지-소비자 가격연동을 높일 수 있도록 계열화된 정육점·정육식당 및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직거래 확대

- 안심한우 브랜드 판매를 위한 정육점형 식당(안심한우마을) 운영으로, 인근 식당에 비해 30% 저렴하게 한우 공급

* 정육점/정육식당 : ('12) 300개소/301개소 → ('13) 537/364 → ('14) 707/380 → ('15) 957/404

* 이동판매차량 운영횟수 : ('12) 6,336회 → ('13) 7,352 → ('14) 7,600 → ('15) 7,800

부위별 수급 및 가격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13.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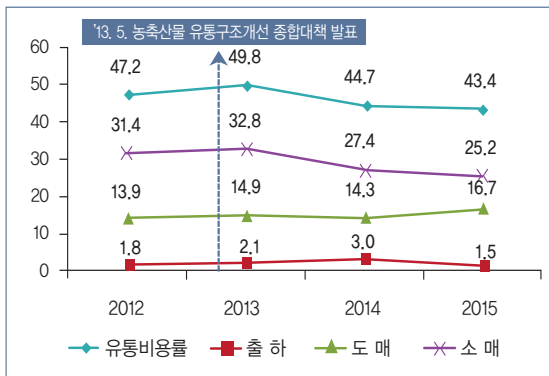
- 창업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기 정착 추진

· 신규창업 지원을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15.7), 경영컨설팅 지원(매년 2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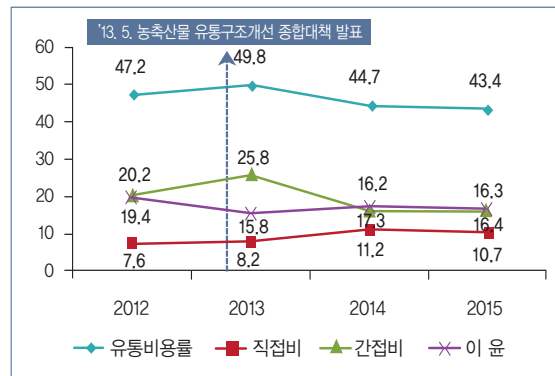
· 식육가공기사 자격증 신설('16), 교육과정 표준안 확정 등

'15.7월 기준 주요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 43.4%로 전년 동월(44.7%) 대비 1.3%p 감소, '13년 이후 2년 연속 하락 지속

- 품목별 유통비용율 : 쇠고기(41.8% → 41.5, △0.3%p), 돼지고기(45.6% → 42.0, △3.6%p), 닭고기(48.7% → 50.2, 1.5%p), 계란(47.6% → 46.7, △0.9%p)
- * 유통비용 : 최종가격에서 농가수취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직접비(수송비, 포장비, 상하차비 등), 간접비(임대료, 인건비, 이자 등), 유통이윤으로 구성
- * 연도별 유통비용률 : ('13) 49.8% → ('14) 44.7% → ('15) 43.4%
- * 해외사례(미국, '14년 USDA 통계 기준) : 쇠고기 44.8%, 돼지고기 67.2%



<그림 16> 단계별 유통비용률(%)



<그림 17> 비용별 유통비용률(%)



산지-소비지 연계 도매물류센터를 통한 유통효율화

농산물 물류센터를 통한 농산물 매출 및 생산자·소비자 후생 증대

농산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류센터를 통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1% 성장

* 매출액 : ('14) 10,074억원 → ('15) 11,796

- 농산물 물류센터를 통한 거래 시 생산자 수취가격은 증가하고, 소비자 구입가격은 인하하는 효과 발생
 - * 물류센터 경유 시, 농가 수취가격은 8.9%p 증, 소비자 구입가격은 6.1%p 감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상품(소포장 간편식 등) 및 맞춤형 상품(세척, 절단 등) 공급 등으로 산지 원물을 구입해 팔아주는 농협의 역할 구현

농산물 전용 도매물류센터를 통한 신상품 개발 및 거래 총수 최소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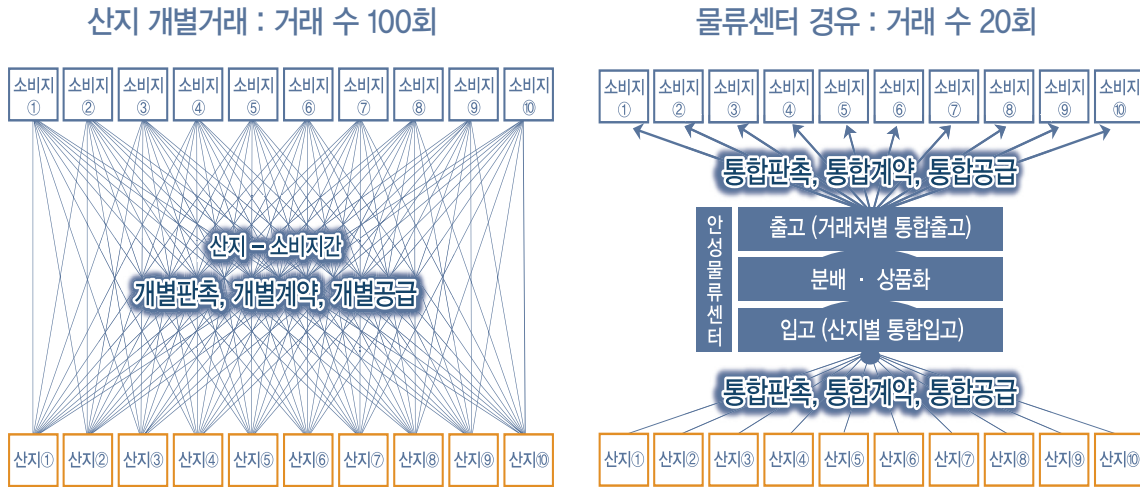
소비지 수요를 반영한 신규 상품(소포장 간편식 등) 및 맞춤형 상품(세척, 절단 등)의 대형유통업체 공급 확대로 판로 확대

* 가공 등 상품화 농산물 공급 : ('14) 445억원 → ('15.10) 488

* 홈플러스 상품화 농산물 공급 : ('13) 46억원 → ('15) 190 (313% 성장)

다품목 소량 거래처에 대한 개별 수집·공급에서 안성물류센터를 통한 수집·분산이 가능해 유통효율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산지-소비지간 거래 수 : (물류센터 미경유 시) 60,000회 → (경유 시) 500회



〈그림 18〉 개별거래와 물류센터를 통한 거래·분산 시 거래 단축 비교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경매제 보완 및 가격 변동 완화

정책자금, 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수수료 인하 지원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거래가 확대되었고 경매제중심 거래의 한계로 지적된 가격 급등락 문제 완화 효과 발생

- 단기간에 정가·수의매매 성과가 가시화*(2년간 63% 증가)
 - * 정가·수의매매 비중 : ('12) 8.9% → ('13) 9.9 → ('15) 16.2 ('15년 목표: 16%)
- 정가·수의매매가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 농가 및 유통인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 특히, 시장사용료 감면분(0.2%p)은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농가에 출하장려금, 포장재, 운송비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에 기여

- 도매시장 전체 거래물량 591만톤 중 96만톤이 정가·수익매매로 거래되어 도매시장 일별 가격변동계수가 4.1%p 하락(최고 13%p 하락) 되는 등 경매제와 비교해 거래가격 안정 효과 발생

* '10년 배추파동 당시 경매가격은 하루만에 54.4% 급등, 35.5% 급락 반복

- 정가·수익매매 거래를 통하여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와 가격을 보장받아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유통중사자는 예약 거래로 균일한 품질의 납품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며, 소비자는 가뭄 등 공급 불안 상황에도 안정적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로 물류 효율화

도매시장 노후화, 시설 부족 및 물류 효율 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저온창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물류체계 효율화

- 대전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완료하였으며('13.11), 그 결과 거래물량이 11.2% 증가, 파렛트 출하율은 14.3% 증가하였음
 - * 거래물량 : ('12) 221,814톤 → ('14) 249,706, 하역비 : ('12) 22,698톤 → ('14) 26,510
- 서울 가락도매시장은 '15년 3월, 1단계로 소매권역 시설현대화 준공을 완료하여 현재 소매권역 이전 배치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도·소매 분리를 위한 물류비 절감이 기대됨
- 충남 천안도매시장은 '16년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15년말 71.6% 공정률 달성
- 경기 수원도매시장은 '15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표 15〉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현황

구 분	서울가락	대전오정	천안
사업기간	2009 ~ 2018(10년)	2009 ~ 2013(5년)	2012 ~ 2016(5년)
총사업비	6,975억원	399억원	387억원
공정상황	- 1단계 완공(2015.2월) - 2·3단계 플랜 마련(2015.12월)	- 1단계 준공(2011.12월) - 2단계 준공(2013.9월)	- 1단계 완공(2014.12월) - 2단계 완공(2016.5월)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

- 도매시장법인이 대형유통업체 등 외부 유통주체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위탁농산물의 상장경매만 허용하던 것을 정가·수익매매를 전제로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는 매수집하까지 허용
 - 경영사업 범위를 농산물의 가공, 저장, 물류 등으로 확대('14.10)
-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하여 소매점(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이 one-stop 쇼핑을 할 수 있게 지원
 - 금지되었던 중도매인 간 거래를 제한적 허용('14.10) 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로 도매시장 활성화 효과 발생
- 유통종사자에 대한 이중 평가 절차를 일원화(지자체, 중앙정부→중앙정부) 하여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됨

또한, 과징금 납부 방식을 합리화하여 과징금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절감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한 가락시장 과밀부담금 면제 조항을 「농안법」에 신설('15.6월)함으로써 정부 예산 700억원 절감 효과 발생

* 과밀부담금 감면(1단계 176억원/2~3단계 525억원)으로 약 700억 예산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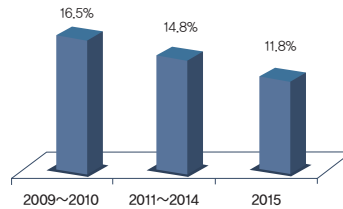
「농안법」 위임에 26개 지자체에서 마련한 40개 조례·규칙·훈령 전수 조사('15.1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목록 113개 조항을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 완화 체감도 제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5대 채소 가격 변동률 완화

수급 상황 발생 시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제적·자율적 수급대책 추진을 통한 가격 급·등락 폭 완화 및 조기 안정 유도

-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라 수급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결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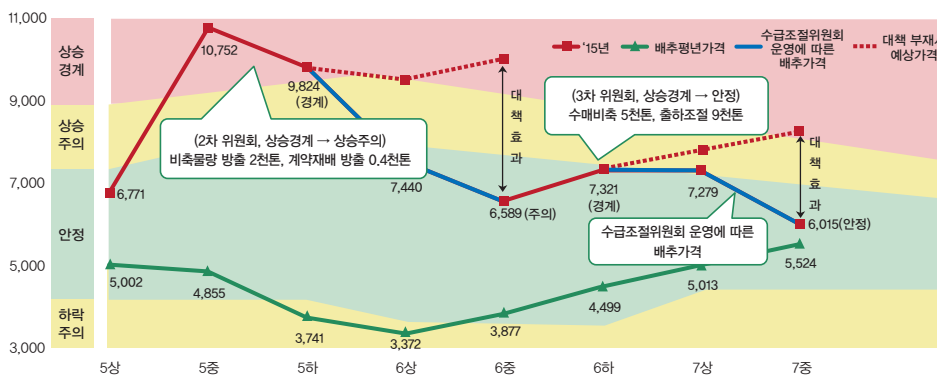


〈그림 19〉 5대 채소 가격변동률(%)

생산안정제를 시범도입(고랭지·겨울 배추, 양파)하여

주산지협의를 통한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 사전적 수급대책 추진

*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18천톤 계약)를 통해 5~6월 가뭄에 따른 8월 출하량 부족 대비



〈그림 20〉 2015년 봄·고랭지배추 가격 안정 사례

*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점검에 따라 2, 3차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제적 대책 추진으로 봄·고랭지배추 가격을 안정시킴

관측 정확성 제고를 통한 수급안정에 기여

단기관측(1~2개월 후의 수급·가격 전망), 중기관측(분기별 동향 및 전망), 장기관측(당해연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장기전망) 등의 정보 제공

-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등과 관련한 다양한 관측정보 제공으로 효과적 수급관리 추진
 - * 관측월보·속보발간, 수급조절위원회·수급점검 회의 시 관측정보 제공 등
 - * 단기 : 관측월보·속보 발행, 중기 : 농업·농촌경제동향 발간, 장기 : 농업전망대회 개최



〈그림 21〉 농업관측월보 홍보물

단수예측 모형* 개발, 표본·모니터링**수 확대 및 ICT***를 활용한 신속한 산지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으로 관측 정확도 제고

- * 단수예측 모형 개발 : 무·배추('14.3), 고추·마늘·양파('14.12)
- ** 표본 확대 : ('13) 16천명 → ('14) 19, 모니터링원 확대 : ('13) 20백명 → ('14) 22
-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활용 : CCTV, 조도·습도·등이 통합된 측정 장치를 현지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 실시간으로 생육상황, 기상정보 등을 수집·활용하여 관측 정확도 향상



〈그림 22〉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설치 전경



〈그림 23〉 해남지역 배추밭 USN 설치 지점

채소류 주산지 현장설명회 개최, 새해영농교육의 관측과목 신설 등 관측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매체홍보 및 농가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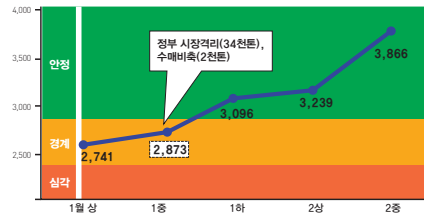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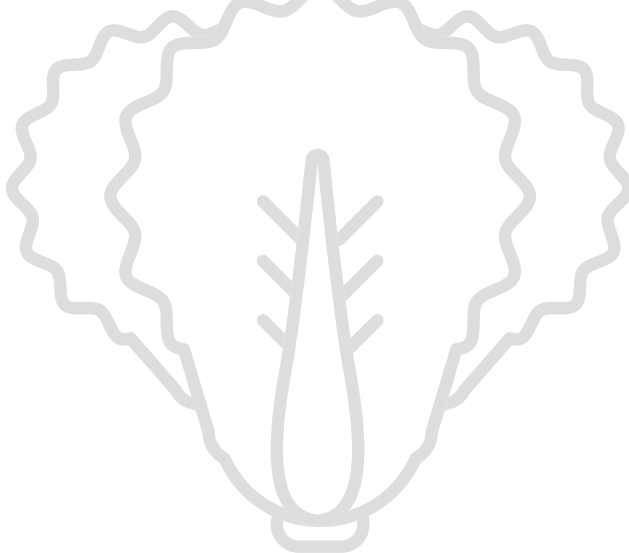
* 고랭지채소류 현장설명회(강원평창, '15.4.14), 월동채소류 현장설명회(영남·호남·제주, '15.8.11~13)

** 교육프로그램(농진청)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대학, 품목별 교육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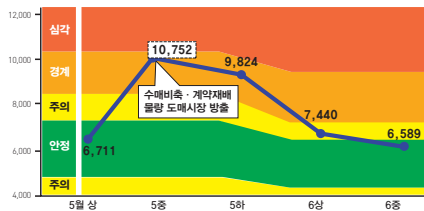
수급불안 시 가격안정대로의 회복기간 단축

수급매뉴얼에 따른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가격의 진폭이 줄어들고, 가격 불안시 안정대로의 회복 기간도 단축

- 지난 겨울배추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1월까지 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으나 신속한 시장격리, 수매비축 등으로 2월에 안정세 진입
- 봄배추의 경우, 가뭄으로 5월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신속한 비축·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여 6월에 가격 안정세 전환



〈그림 24〉 2015년 겨울배추 도매가격(원/10Kg, 상품)



〈그림 25〉 2015년 봄배추 도매가격(원/10Kg, 상품)

자율적 수급조절정책(수급조절위원회 및 매뉴얼) 작동원리

(운영원칙) 생산자, 소비자 및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예측 가능성 높은 선제적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안정화 추진

-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의한 안정화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개입

(추진체계) 수급조절매뉴얼 및 수급조절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효과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율적 수급안정정책의 중심 거버넌스로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학계·연구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구성
 - 수급조절위원회는 품목별 수급상황 분석, 수급안정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지원 등 수행
 - * 20인으로 구성되며 민간 및 공무원(식품산업정책실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시장개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품목별 중심가격 대비 실제가격(5년간 도매가격) 변동률을 기초로 가격안정대 설정
 - * 수급이 불안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상승·하락 등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주의, 경계, 심각단계 등 3단계 구간을 설정

하락구간 단계별 대응조치		상승구간 단계별 대응조치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 대응방안 사전검토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억제 • 저급품 출하억제 유통협약 • 저장·가공용 구매 활성화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물량 방출확대 • 비축물량 시장공급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증량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최저가격에 의한 구매·비축실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할인 판매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개입절차) 시장가격 및 가격안정대를 기초로 하되, 개입여부 및 개입수준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엄격하게 운영

- 대응절차는 “불안징후 감지·수급상황 분석(aT) → 위기상황 평가 및 경계·심각단계시 위기 경보 발령 결정 (수급조절위) → 경보발령(농식품부) → 조치사항 추진

2 향후 과제

보완방향

산지 거래 교섭력 제고 및 조직화 내실화

산지의 거래교섭력이 충분하지 않아 대형 소비처와 직거래,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 등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

규모화·조직화가 일부 진전되었으나 양적·질적 성장간 부조화로 산지유통조직 내 조직화 편차가 큰 실정 해소 필요

- 특히, 시장개방 확대, 유통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화 추진

생산·출하단계의 수급조절기능 및 자율적 수급관리역량 강화

기상이변, 경기침체 등 수급측면의 급격한 충격 시 시장기능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한계

-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이 반복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기초농산물수매제, 최저가격보장제 등 가격 보전 요구

계약재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중인 생산안정제와 수입보장보험 정책간 관계 설정 필요

- 향후 일정 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 보장과 보험금 지급의 이종지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

수급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해 지자체 자율의 수급관리 역량 제고

새로운 유통모델 조기 정착으로 성과 확산

공영홈쇼핑을 통한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외에 일시적 공급 과잉 해소, 농촌의 가치 홍보 등 다양한 기능 활성화 필요

향후 보완과제

산지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제고

산지의 거래교섭력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규모화·조직화 유도

브랜드화의 전제 조건인 균일한 상품의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감시자 역할 수행

- 생산단계의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GAP 확산 추진

생산자·지자체의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보완화

주산지 중심의 적정 생산 및 출하조절 등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자체 자율의 수급안정정책 뒷받침
계약재배가 가격위험 관리 및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 생산·출하안정사업 확산

- 중장기적으로 생산안정제의 경영 안정 기능을 수입보장보험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통합적 운영방안 검토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해 저장업체 및 수요처 소비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관측 조사표본 정비 등을 통한 관측 고도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16.6.23)에 맞추어 지역 중심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 대규모 산지는 APC, 대형수요처와 연계하고, 소규모 영세농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지역 내 수급시스템 마련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6차산업화 상품, GAP 등 정책상품과 우수한 지역 특화상품을 발굴하고, 공영 TV홈쇼핑 기획판매전 추진 등을 통한 농가 판로 제공

〈 참고 〉 보완과제별 세부계획(안)

산지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제고

산지 조직화·규모화

산지의 거래교섭력 증대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규모화 유도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대규모 거래처와 연계한 수급조절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농협중앙회 투자 확충*을 통해 경영안정화 등을 지원하고, 우수인력 우선 배치 등 마케팅역량 강화

*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활용, 기존 대여투자를 지분 및 대여투자로 개선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산지에서 균일한 상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규모화·조직화하고,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발작물 공동경영체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종자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등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해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체 육성

발작물 공동경영체 세부계획(안)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
- 기대효과
 - 조직화규모화 된 생산자 조직 구성으로 국가 경쟁력 기반 확보
 -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유통 계열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확보 및 브랜드 강화로 농가 소득 향상
 -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 참여 주체로서 사전 재배면적 조절 및 출하량 조절을 통해 범 국가적 가격 안정에 기여
- 투융자계획(단위 : 백만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 산	2,450	9,200	14,950	20,200	20,200	20,200	21,700	25,200	25,200	25,200	17,700

생산자·지자체의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보완

주산지 중심의 적정 재배 및 출하조절 등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자체 자율의 수급안정정책 뒷받침 추진

주산지 육성

발농업 품목의 주산지 중심 산지 조직화 및 유통 계열화, 수급안정 등 지역·품목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산지 실태를 고려한 정책 지원 확대

- 발농업 주산지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 적정 대상지역 선정, 지역 자율의 수급조절체계 구축 등 지원

주산지 실태조사 계획(안)

- 수급조절체계 운영 및 적정 비축물량 산정 근거 제시
- 대 상 : 비축, 계약재배, 수급관리 10개 품목 주산지(약 108천ha)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참깨, 콩, 감자
 - * 향후 발작물 주요 품목으로 확대
- 조사내용 : 주산지 영농여건 및 유통경로, 조직 등 전반적 실태
 - 농경지 지목별 현황 및 위치, 경사도, 재배작목 현황
 - 수리시설물 위치 및 수계, 용수공급 유역 현황
 -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농기계 보유 현황 및 공급 지역 현황
 - 농산물종합처리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관련 시설 현황
 - 농업법인, 농협 등 생산자 조직 현황 및 관할 농경지 범위
 - 어메니티 자원 등 산업화(가공시설, 관광 등) 연계 가능 자원 현황
- 수행방법 : 기존 구축 DB를 활용하되 수계, 유역면적, 유통시설, 농기계창고, 법인 등은 현지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실태 파악
 - 조사결과는 R&D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작물 주산지 선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GIS기반 자원관리기술 개발' 시스템으로 구현

생산·출하안정제

계약재배가 가격위험 관리,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재배 사업을 채소류 생산 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 추진

- '20년까지 5대 수급안정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실질적 수급안정 기능 강화
 - * 품목 : ('15)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 ('17) 배추, 마늘, 양파, 고랭지·겨울 무 → ('20)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 * 계약비율 : ('15) 품목별 생산량 기준 5% → ('17) 10% → ('20) 15% 수준

생산·출하안정제 세부계획(안)

-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을 「주요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16~)
- (출하안정, 개선) '16년 출하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
 - 가격보장대 운영, 참여조직 확대를 위한 지침 개정 검토 및 의견수렴
 - * 고정출하 물량 등 미확보 조직에 대한 자금은 단계적 회수(~'18년 까지)
- (생산안정, 신규) '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품목·물량 확대하여 확대·개편('20년까지 5대 품목, 전체 물량의 15% 수준 확보)
 - 품목 : ('15)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 ('17) 배추, 마늘, 양파, 고랭지·겨울 무 → ('20)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 계약비율 : ('15) 품목별 생산량 기준 5% → ('17) 10% → ('20) 15% 수준

구 분	기 존	개 선(출하안정)	신 규(생산안정)
사업주체	농협 위주	기업·법인으로 확대	산지 유통인 등 참여확대
대상지역	주산지 + 비주산지	주산지 + 비주산지	주산지 중심
물량확보	농협 10% + aT 8% * 수급조절물량 약 9%	'20년까지 15% 이상	수급조절물량 15%이상 확보
재원부담	중앙정부	중앙, 지자체 등	중앙,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참여유인	최저가격 (직접생산비 또는 경영비)	계약가격보장대	평년가격의 80%수준 보장

수입보장보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해 시장개방 확대, 이상 기후 등에 따른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주는 경영안정 수단으로 지원

* '15년 3개 품목 : 양파, 콩, 포도

* 시범사업 참여 14개 시·군: 콩(김제, 문경, 서귀포, 제주), 양파(익산, 무안, 함평, 창녕, 합천), 포도(화성, 영동, 상주, 영주, 영천)

수입보장보험 세부계획(안)

- (실시기간) '15. 1월 ~ '17. 12월 (3년간)
- (대상품목) 도상연습 대상 품목 중 제도 도입효과, 가격변동성, 가입가능성 등(3개 항목 9개 지표)이 높은 양파, 콩, 포도 선정
 - * (양파) 노지채소 중 농가당 생산액 비중이 높고, 가격변동성 매우 높음
 - * (콩) 식량작물 중 생산액, 농가수 및 재배면적 비중 높고, 가격변동성 높음
 - * (포도) 과수 품목 중 농가의 가격안정 요구 높고, 실수확량 조사 용이함
- (가입농가)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가능 규모 이상의 농가 대상
 - * (콩) 4,500㎡이상 경작 및 가입기준 300만원 이상, (포도) 1,000㎡이상 경작 및 가입기준 300만원 이상, (양파) 1,500㎡이상 경작 등
- (대상지역) 경북(4), 경남(2), 전남(2), 전북(2), 제주(2), 기타(2) 등 14개 시·군
 - 품목별 주산지, 도상연습 실시 시·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양파(5) : 무안, 함평(전남), 익산(전북), 창녕, 합천(경남)
 - * 콩(4) : 김제(전북), 문경(경북), 서귀포, 제주(제주)
 - * 포도(5) : 상주, 영주, 영천(경북), 영동(충북), 화성(경기)
- (정부지원) 3개 품목 보험료(보험료의 50%), 운영비 등 약 32억원 소요
- (향후 계획)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도입 및 확대 여부 결정
 - '16년 마늘 품목을 추가하여 시범사업 추진
 - * 품목 확대(3-6품목, '17), 본사업 전환(10품목, '20), 대상 품목 확대(15개 품목, '25)

지자체 자율수급안정

가격 변동성과 지역 집중도가 높은 당근, 대파 등 지역 특화 품목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지자체 주도의 수급조절기능 강화 지원

-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 및 채소류 유통명령제 도입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대책 적극 유도

지자체 자율수급안정 세부계획(안)

- 지자체의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구축
- 지원내용
 - 채소류 공급과잉 등 수급불안 시 지자체·생산자 자율적 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산지폐기 등)에 대한 국고 매칭 지원
- 대상품목 : 당근, 양배추, 대파 등
 - 정부 집중관리 품목* 외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특정지역에 재배가 집중되어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이 용이한 품목
 - * 정부 집중관리 품목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 지원대상 : 시·도지사(시장·군수)
 - 지자체·생산자단체 주도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급불안 시 자체조성 기금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한 시·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역 내 생산유통체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지역 중심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지역 내 수급시스템 마련

- 대규모 산지는 APC, 대형수요처와 연계하고, 소규모 영세농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지역 내 수급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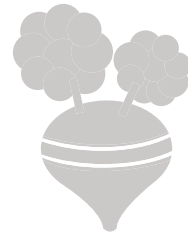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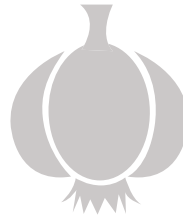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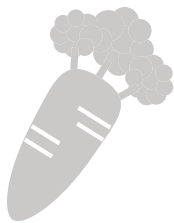
관측 고도화

농산물 가격 안정과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관측 고도화 추진

- 수급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저장업체 조사 확대 및 대량 수요처 소비실태 조사 강화
- 관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통계청 등 관련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추진
- 조사표본 정비 및 조사방법 등 관측정보의 생산체계 정비

관측 고도화 세부계획(안)

- 저장·소비관측 정보 강화
 - 채소류(마늘·양파) 저장업체 조사대상 확대(120개소 → 150) 및 대량수요처 소비실태 강화(건고추, 연 2회 조사 → 5대 품목 확대, 연 5회 조사)
 - 정보수집 제공업체에 대한 정책사업 인센티브 강화(산지유통활성화, 식품·외식종합자금,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선정·지원 시 가점 부여)
- 통계청과 추계방법 협조체계 구축
 - 통계청과 조사대상 및 방법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 강화(현안중심·비공개) 및 재배면적·단수 현장 조사방법 공유
- 기상청 기상정보 제공 및 양념류 단수예측모형 이관
 - 주산지 시·군 기상예보자료(기상대 있는 곳) 제공 가능 여부 청내 협의후 통보
 - 양념류 단수예측모형 업무협약을 통해 이관 추진
- 관측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생산자단체 전달체계 구축
 - 개별농가보다 생산자단체(주산지협의체)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후 사후평가(생산조정·정보활용 실적 등)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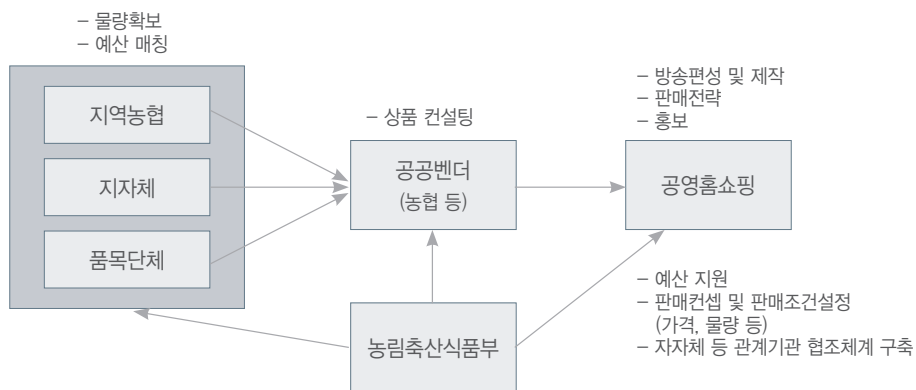
공영 TV홈쇼핑

6차산업화 상품, GAP 등 정책상품 발굴 및 기획판매전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상품 및 관광 문화상품과 연계확대

- 지역 및 주산지 중심으로 소비자 맞춤형 농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화·특화 및 품질의 표준화를 유도

공영 TV홈쇼핑 세부계획(안)

- 목적
 - 6차산업화 상품, GAP 등 정책브랜드 상품에 대한 기획판매전 발굴로 농식품의 홈쇼핑 판매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우수가치 홍보
- 추진 전략
 - (상품 발굴) 우리 부 내 각 부서(품목과), 민간단체, 지자체 및 홈쇼핑판매 활성화 추진단을 통해 기획판매전 아이템 발굴
 - * 물량확보: 지역농협, 지자체, 품목단체 등의 협조
 - (재원확보) 직거래 활성화 사업 예산 및 품목별 자조금·홍보비 및 지자체 예산을 매칭
 - (기타) 지역 특화 상품, 지역 자체브랜드 및 지역 관광 문화상품 등 발굴·협력사업 개발
- 농식품 기획판매 사업 프로세스



GAP 확대 및 농산물 안전 관리

GAP

GAP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농업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및 교육 등 확대

- 주산지별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및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토양·용수를 분석하고 GAP 추진 계획 수립 지원
 - * '16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 국비 60억, 지방비 60억
- 공동경영체 단위 집단 인증이 가능하도록 교육·컨설팅 등 지원 강화
- GAP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급식·유통 판매 채널 확보

〈표 16〉 GAP 세부계획(안)

구 분	주요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인증 GAP 자기주도적 교육 신규 추진 ● 유통업체(홈플러스, 올가) 납품 GAP 생산자 교육 ● 품목별 GAP 교육(과수연합회, 생약협회 등)
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 및 지역특화단지 토양, 용수 등 GAP 안전성 분석 실시(전국단위) ● GAP인증 희망 농업인 컨설팅 ● GAP인증기관 운영 활성화 ● GAP인증농가 개별 잔류물질 검사비 지원
농촌 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및 엽채류 종합 GAP 시범단지 조성으로 우수 GAP 모델 발굴 등 ● 약용작물 신제품 GAP 재배 확대 ● 농업인 GAP 인증교육 확대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GAP 인증 및 유통 활성화
농협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청과사업단 GAP 취급액 확대 ● 농협 명인명작 GAP 적용 및 프라네 브랜드와 GAP 인증 연계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인증 홍보(GAP 캐릭터 및 포장디자인 홍보, 홍보영상 TV 및 KTX 등) ● GAP 전문인력양성교육 수행

농산물 안전관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새로운 유통채널 및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지원을 강화

-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MOU 체결로, 협업·소통에 기반한 산지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 * 농관원-농협 MOU로 연합마케팅조직 공동브랜드 농산물 6천건 안전성조사('16)
- 최근 성장세에 있는 로컬푸드 직거래 관련 안전관리는 식약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 수출농가에 대한 수입국 기준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 강화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추진목적

-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수출농산물 및 인삼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수출확대 지원 등 농가 소득 증대

주요 추진내용

- (현장 지도·교육 강화) 불요불급한 조사는 축소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발생이 없거나 낮은 품목은 조사를 줄이고 취약품목 중심으로 조사 강화
 -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여 조사계획 수립 등 정책에 활용
 - 논·밭 직접지불제, 수출농산물, 인삼, 친환경 및 GAP 인증농산물 등 농업정책 사업과 연계된 안전관리 지원
 -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대상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한 국민 안심 유도
- (인프라 확충) 연구·분석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직 확충과 조사·분석업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등의 분석업무 품질관리 기준」 마련

- (소통강화) 정부 3.0과 연계, 잔류농약 등 조사결과를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성 관련정보 부족에 따른 불안감 해소
 - * 공개항목 : 품목, 생산지, 재배면적, 분석결과(검출성분, 검출량, 적부 등), 등록일자 등
- (업무협력) MOU체결한 해외 기관과 교류 내실화 및 국내 안전관리 기관간 협업 확대
 - 미국 농업연구청(ARS)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
 - 아시아 개발도상국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초청연수(5월) 및 식약처(지방청), 시·도 등과 업무협약체 구성 및 참여

중점 추진사항

- (로컬푸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브랜드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 * '16년부터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내 농산물도 안전성조사 추진
- (학교급식) 급식 식자재의 전자조달 규모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4·9월)를 추진하여 안전·위생상태 점검

< 참고. 농관원-농협, 산지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15.12.9.) >

추진배경

- 농산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농관원과 유통관리 전문기관인 농협 간 업무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농협 연합마케팅조직을 산지의 안전관리 선도조직으로 육성

업무협약 주요내용

- (안전성조사) 연합마케팅조직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생산·유통단계 조사대상 시료 공동수거 및 분석결과 공유
 - * 연간 안전성 조사물량 : 연합마케팅조직 6천건, 로컬푸드 3천건
- (정보공유)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품목별 생산자 정보, 출하정보 등
- (교육·홍보) 농산물 안전관리, 인증제도 및 품질관리 분야
- (기타)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

기대효과

- 납품농가의 재배정보 공유를 통하여 안전성조사 대상자 선정, 공동 시료수거 등 안전성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지역농협 직원과 공동으로 시료수거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협업 기회로 활용
- 농협 연합마케팅조직을 농산물 안전관리 자율조직으로 육성하여 주변의 소규모 조직으로 확산 유도

〈부록〉

농축산물 유통정책 개선사례 2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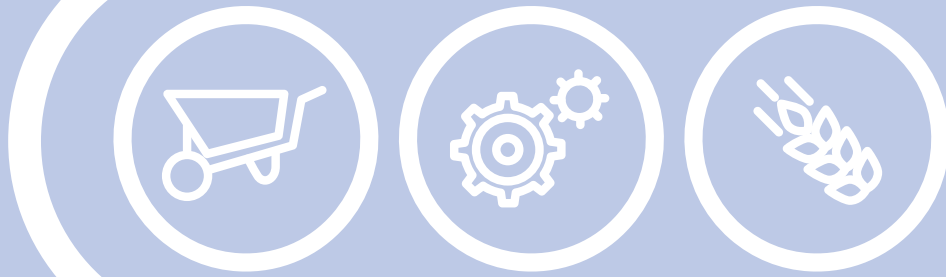
- 1 유통경로간 경쟁을 통한 유통
효율화 사례
- 2 참여와 합의에 의한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체계 사례
- 3 소비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사례





1 유통경로간 경쟁을 통한 유통 효율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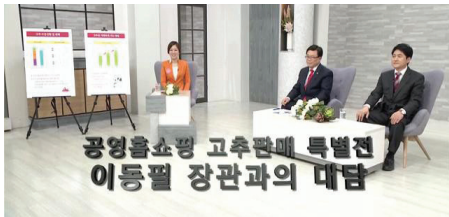




- 1-1 공영홈쇼핑 활성화(공급과잉 견고추 특별판매전)
- 1-2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 직거래(이마트 국산의 힘 프로젝트)
- 1-3 구석구석 누비는 로컬푸드 트럭으로 직거래를 더욱 편하게
(전남 일로농협)
- 1-4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로컬푸드 직매장
(완주 용진농협)
- 1-5 축산물 유통효율화를 앞당기는 협동조합형 패커 확대
(안심축산)
- 1-6 안성물류센터 본격 가동(소셜커머스 쿠팡 신선농산물 공급)

①-1 | 공영홈쇼핑 활성화(공급과잉 건고추 특별판매전)

공영홈쇼핑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까지



효과

- 단시간 판매극대화로 수급 불균형 해소
- 2,835만 가구에 국내산 농산물 홍보
- 국내산 건고추 판로 확대

'15년도는 국산 건고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냉동고추 수입증가, 국내산 건고추 수요 감소 등으로 약 1만톤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수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 2,835만 가구에 송출되는 공영홈쇼핑 채널을 활용하여, 시중가보다 약30% 저렴한 가격으로 건고추 상품만 1일 8시간 집중 편성 판매하는 홈쇼핑 사상 최초의 시도를 통해 수급청산 및 붐업을 피하였다.

특판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출연하여 소비촉진을 독려하고 정부의 수급정책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특판 1일 동안 건고추 상품 약 1만 세트 판매라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총 33톤, 약 5억원 규모로서 시간당 판매량으로는 평시의 4배이다.

방송 이후에도 임실지역 건고추(가루)가 롯데마트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계효과가 발생하였다. 임실 건고추(가루)는 초도 3톤을 시작으로 약 100여개 매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고추 수급조절에 대한 공영홈쇼핑의 성공사례를 쌀, 사과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형유통업체 이마트가 손을 잡고 '국산의 힘'이라는 농가-기업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오랜 고민거리인 판로 개척과 유통망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마트가 MOU를 체결하고 우수농가를 발굴하여, 이마트 매장을 통한 직거래 기회를 제공한다.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받는 동시에, 개별농가가 하기 어려운 마케팅, 디자인, 브랜딩 등 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되며, 더불어 농업경영 컨설팅과 해외 선진지 연수 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우수농가들의 프로젝트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지 우수농가 발굴, 농산물우수관리(GAP) 컨설팅 및 농가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

국산의 힘 프로젝트를 통해 '15년 3월부터 '15년 10월까지 8개월간 58농가를 발굴하여 174억원을 판매하였다. 농가당 평균 3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15년 말까지 78농가 참여, 판매액 200억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16년까지 130농가 참여, 판매액 4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 유통분야에서의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은 농업인이 생산한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된 것으로 기대된다.

①-2 |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 직거래
(이마트 국산의 힘 프로젝트)

농산물이 가는 새로운 통로, 대기업 유통망으로 개척

효과

- 농가 수입증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농산물 유통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농업경영 및 품질개선





①-3 | 구석구석 누비는 로컬푸드 트럭으로 직거래를 더욱 편하게(전남 일로농협)

로컬푸드 트럭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편하게

효과

직거래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체험 확대

지역단위까지 직거래가 확산되는 효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활성화로 도농상생 실현

농림축산식품부의 직거래활성화 정책에 따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무안 일로농협은 2014년 5월부터 남악신도시 등지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는 4.5톤 냉장탑차에 로컬푸드 직매장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직거래 모델로, 탑차에 바퀴달린 로컬푸드 매대를 싣고 아파트단지 등 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기존 장터나 직매장의 지리적 제약을 극복한 소비자 중심의 직거래 모델로, 정부가 추진한 직거래장터 및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과 민간의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는 당일 출하 농산물을 집앞에서 30~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장터 유치를 위해 자치회 운영규칙을 개정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다.

나주의 A회사 로비에 설치한 후 직장인들이 퇴근하며 간편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일로농협과 같은 우수사업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를 육성하고 있다.

2012년 4월 개장한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직매장으로서 당일수확 당일판매, 생산자 표시제 등 직매장의 표준원칙들을 만들어 생산자·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주자이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컨테스트를 통해 용진농협 직매장을 발굴하여(직매장부문 최우수) 마케팅자금을 지원하고, 2호점 확장 시에는 인테리어·시설비 등 직매장 설치자금을 지원하였다.

개장 초기 낮은 인지도와 소비자확보에 애로를 겪었던 용진농협 직매장은 정부의 마케팅 홍보 지원에 힘입어 2014년 말 매출액 89억원을 달성함으로써 1개 매장에서만 약 18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직매장 유통비용 절감률 20%

더불어 판로가 없어 농사를 포기하려고 했던 영세농과 고령 농들은 직매장을 통한 소량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소득원이 생겼으며, 소비자들은 로컬푸드의 우수성과 직거래의 장점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농식품부는 2016년까지 직매장 1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직매장과 우수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①-4 |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로컬푸드 직매장(완주 용진농협)

농산물 직거래 1번지,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효과

유통구조 개선 및 비용절감

농업인에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제공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가계경제에 기여



①-5 |
**축산물 유통효율화를 앞당기는
 협동조합형 패커 확대(안심축산)**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으로 유통단계 축소

효과

- 축산농가 안정적인 생산기반 지지
-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후생 제고
- 우리 축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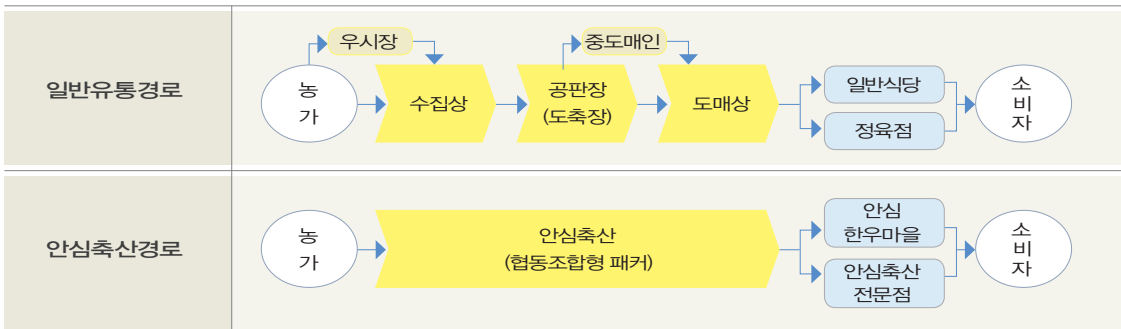
정부는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비자의 후생수준 제고를 위해 축산물의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갖춘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농협(안심축산, 지역조합)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산지와 계열화된 정육점/정육식당 및 온라인 거래 등 기존 유통경로와는 차별화된 판매방식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축산물프라자는 조합원 계통출하 및 자체 가공공장 운영을 통해 일반 한우전문점에 비해 25.7%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15.11월 기준)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인 'e-고기장터'는 B2B 직거래 판매채널로 실시간 거래와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일반 온라인 판매처보다 11.3% 저렴하다.

또한, 핵가족·싱글족 등 소비자 요구에 맞춰 소량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칼 없는 정육점'은 사업시작 2년만에 전국에 360여개가 설치되는 등 확산 추세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와 국내최대 E-커머스 기업 쿠팡이 손을 잡았다. 이제 전국 각지의 농산물을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신선하게 배송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쿠팡은 지난 6월 19일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값싸고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상호협력 하에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창조 경제적인 유통혁신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실익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기존 대비 10~20%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편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고 유통비용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다. 총면적 1,600평에 달하는 40개의 저온저장고를 활용하여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에게는 모바일 배송망을 통한 새로운 판로를 제시함으로써 소득원을 제공하고, E-커머스 시장에 맞는 신상품 개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과 쿠팡의 협력에 따라 농산물 판매량은 지난 9월 이후 11.6%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상품 개발과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며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①-6 | 안성물류센터 본격 가동
(소셜커머스 쿠팡 신선농산물 공급)

농협, 쿠팡과의 연계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효과

유통구조 개선 및 비용 절감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판로와 소득원 제공

E-커머스로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농가경영





2 참여와 합의에 의한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체계 사례





- 2-1 가격안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수입 자제
(TRQ 증량 최소화, 할당관세)
- 2-2 주산지 조직화를 통해 지자체 수급역량 강화(변산농협)
- 2-3 제주 월동채소 가격안정을 위한
지자체 자율의 수급대책 추진(자율수급)
- 2-4 생산안정제를 통한 사전면적 조절 등으로 수급불안 대비
(강원도 고랭지배추)
- 2-5 참여와 합의에 의한 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봄배추 가격 안정(민관협업)
- 2-6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민생안정)
- 2-7 양돈 공급과잉에 대응한 축산인 자율의 모든 감축 조치
(민관협업)
- 2-8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1경매사-1품목-1산지선정 운동



②-1 |
 가격안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수입 자제(TRQ 증량 최소화, 할당관세)

가격안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양파·마늘 수입자제

효과

선제적인 수급 대책으로 TRQ 증량 최소화

할당관세 미적용으로 생산자와 관련산업 보호

수급불안 적기대응으로 국내시장 안정

정부는 '15년산 양파·마늘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해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과 가격안정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TRQ 증량을 최소화하고 할당관세 미적용으로 생산자의 불만·집회 사전 방지 및 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와 5~6월 고온·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수급상 부족량이 양파 264천톤, 마늘 65천톤에 이르렀으며, 이는 할당관세 110천톤을 적용하여 3천여명의 집회·시위를 초래한 '12년산 부족량 164천톤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생산최성기인 지난 6월 농업관측 기준으로 '심각경보' 즉각 발령 및 당시 부족량인 양파 140천톤, 마늘 41천톤에 한해 증량조치를 하고 대국민홍보 강화로 가격을 안정시켰으며, 양파에 대해 할당관세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실수요자배정 방식(수입권공매방식의 공매납입금 제거)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생산자를 자극하고 양파산업을 위축시키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증량 최소화, 할당관세 미적용 등의 선제적 조치에 힘입어 양파·마늘 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낮고 안정된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양파1,300~1,600원/kg, 마늘 4,600~5,600원/kg)

앞으로도 정부는 양파·마늘 등 채소류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토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안정과 채소류 산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와 국산소비 정체로 국내 농산물 시장 및 생산기반이 불안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밭농업은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로 작목전환이 용이, 고령화 심화 및 노동집약적 특성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부안군 변산에 있는 양파 농가들도 농업인의 고령화,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등 불안정한 양파값에 시름을 앓고 있었다.

이런 농가들을 위해 밭 벗고 나선 '변산농업협동조합'이 생산·유통·소비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여 흩어져 있는 농가들을 조직화 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관내 양파 생산기반을 확대시켰다.

먼저, 변산농협에서는 우수종자 선정, 파종 및 보급으로 품종을 균일화 시키도록 관리를 하였으며, 농가들은 조합을 신뢰하고 제공된 교육자료 및 정보에 맞춰 오로지 양파 재배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변산농협은 부안군 양파 농가들에게 생산성 향상 및 비용 60% 절감 효과와 저장 부패율 기존 30% → 3% 감소, 균일한 품위 보장으로 유통 판로 확대 등 소비 시장에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박근혜정부 농정도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공동영농 등을 통해 품질관리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유통계열화를 통해 통합 마케팅을 함으로써 시장교섭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②-2 |

주산지 조직화를 통해 지자체 수급역량 강화(변산농협)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 규모화 추진

효과

밭작물 생산기반 정비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및 판로 다각화로 소득 제고

농산물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확립





②-3 | 제주 월동채소 가격안정을 위한
지자체 자율의 수급대책 추진(자율수급)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대책 추진을 통한 월동채소 가격안정



효과

생산자 중심의 사전 수급조절로 가격 조기안정 유도

고부가 가치 및 판로 다각화로 소득 제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작년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월동채소의 가격이 공급과잉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도는 생산자단체와 적극적인 자율 수급대책을 추진하였다.

파종·정식 전 백주보리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생산자 자율감축,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였다. 품목별 생산자 대표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저급품 시장출하를 제한하고, 자체 감시단을 운영하여 실행 여부를 감독하는 등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도 지역 특화품목의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15년 자율적 수급조절 지원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제주도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 11억 원을 지원하였다.

자구적 노력의 결과, 하락했던 월동채소 가격이 조기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15년 4월초 기준으로 도매가격은 '14년 말 대책 추진 전과 대비하여 무는 24%, 당근은 19%, 양배추는 41% 까지 상승하였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수급안정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통명령제,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자율 수급대책 추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5년 노지채소수급안정 사업을 '채소류 생산 출하안정 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15년 고랭지·겨울 배추, 양파 생산안정제를 시범적으로 추진 하였다.

생산안정제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육단계 면적 조절 등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참여 농가에는 평년 도매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주산지 조직화를 통한 자율·사전적 수급대책을 통해 계약재배가 실질적 수급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실제 5~6월 심각한 가뭄으로 여름철 고랭지 배추 공급 부족이 예상되자, 가입면적 38ha (2,500톤)를 조기 정식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작황호조로 가격이 급락 했던 8월 상순 약 800톤의 생산안정제 물량을 출하정지 하여, 가격을 평년 수준으로 조기 회복(4,641원/10kg → 7,616원)시켰다.

정부는 생산안정제 물량과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전·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약정가격 보장 등을 통한 소득안정 강화 등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16년 출하안정제를 도입하여 목적과 용도(고정거래·수급조절·시장출하)에 따라 지원을 체계화하고, 식품업체 등 실수요처와의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하여 계약재배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②-4 |

생산안정제를 통한 사전면적 조절 등으로 수급불안 대비(강원도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를 통한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으로 수급불안 해소

효과

주산지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

생육단계 면적조절 통한 사전적 수급안정

참여 농가에 안정적 농산물 가격 보장





②-5 | 참여와 합의에 의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봄배추 가격 안정(민관협업)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금년 봄배추의 경우, 생산량(19만 3천톤)이 평년보다 27% 감소하고, 월동 저장배추 출하량도 감소함에 따라 5월 상순 배추 가격은 평년대비 119%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15.5.13.)하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에 따라 수매비축 물량 2천톤과 계약재배 물량 400톤을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하였으며, 전국 2,115개소 농협 하나로 클럽·마트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수급대책 추진으로 5월 중순 10kg당 (3포기) 10,752원으로 가격에 따른 위기단계를 구분한 수급조절 매뉴얼 상 '상승경계' 단계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6월 중순에는 6,589원으로 '상승주의' 단계로 안정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을 완화하고, 배추 등에 생산안정제*, 출하안정제** 확대 등을 통해 이상기상 등에 따른 급격한 수급변동에 대응할 계획이다.

효과

민·관 수급대책 추진을 통한 가격안정

배추 가격안정화 기간 단축

*생산안정제: 주산지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을 위한 계약물량에 대해 평년가격의 80% 보장 ('15: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 '16: 고랭지·겨울배추, 겨울무, 양파)

** 출하안정제: 농협 중심 계약재배를 고정거래형, 수급조절형, 시장출하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실수요처 중심으로 고정거래 비중 대폭 확대('16: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올해 양호한 기상조건에 따라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풍작이 예상되면서 추석기간 중 농축산물 소비 급증이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경기부진에 따른 구매력 위축 및 농축산물 소비 둔화도 우려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소비자 모두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하여, 성수품 수급 안정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공급확대를 위해 제수용·선물용 사과·배·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선정하여, 공급량을 평시대비 평균 1.4배(7.7천톤)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코리아 농산물 그랜드 세일행사(9.7.~9.26.)를 기획하여, 농협·산림조합 하나로마트 등 2,127개소를 통한 제수용품, 과일·한우선물세트 10~35% 할인판매 및 예약판매로 8,518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전년대비 1.4%)하였으며, 바로마켓, 전국동시 직거래장터(지자체·농협 413개소) 개설 및 로컬푸드 직매장(100개소) 운영 확대하였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부류별 최적 구매시기 제공(3회) 및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차례상 구매비용 정보, 주요품목 가격 및 직거래 장터 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명절 수요 확대를 대비하여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명절 성수품 공급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추진

효과

명절 성수품의 집중공급을 통한 수급안정

특판행사, 알뜰장보기 정보제공 등 소비자 편의제공





②-7 | 양돈 공급과잉에 대응한 축산인 자율의 모든 감축 조치(민관협업)

민관 협업을 통한 양돈 공급과잉 조기 해소

효과

돼지고기수급불안조기해소

민관 협업의 수급관리 사례 축적

'13년 3월 돼지 사육두수가 전년대비 14.1% 증가한 10,107천두를 기록하는 등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돼지가격이 두당 24만원으로 경영비인 28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정부와 양돈농가 등은 '13년 3월부터 모든 의무감축을 추진하였다.

양돈농가는 자발적으로 모든 10%(10만마리) 감축을 추진하고, 정부는 모든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를 정책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게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양돈조합과 육가공업계 간 월 250톤의 뒷다리살(원료육) 장기공급 협약을 추진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과 양돈농가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의 결과, 총 13만두의 모돈을 감축하여 3월 두당 24만원이었던 돼지가격이 12월 33만원으로 회복되어 수급불안이 조기에 해소되었다.

모든 의무감축 사례는 수급관리 정책이 수매 중심에서 민관 협업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여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수급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거래단위를 규모화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12년 8.9%→'16년 20%)를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자금지원,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주체는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모범사례로, 대전중앙청과(주)는 '1경매사-1품목-1산지선정(1-1-1운동)'을 전개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1-1운동'은 한 명의 경매사가 하나의 산지의 한 품목을 선정해 정가·수의매매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가·수의매매 확산모델이다. 대전청과에 근무하는 경매사는 총 12명으로 모든 경매사들이 괴산 배추, 옥천 상추, 진주 고추, 논산 딸기 등 한 산지 품목을 전담해 전국 각지의 우수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물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경매사들이 농가를 전담하여 담당하고 계속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정가·수의매매의 장점에 대하여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우수 농산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등 품목 유지를 위해 힘쓰는 따라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결과 해당 법인은 전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율('14년 14.1%→'15년 16.2%)보다 더 높은 비율인 '14년 22.7%에서 '15년 30%의 큰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위와 같은 새로운 정가·수의매매 확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과 가격에 대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이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추진



효과

예약거래 중심의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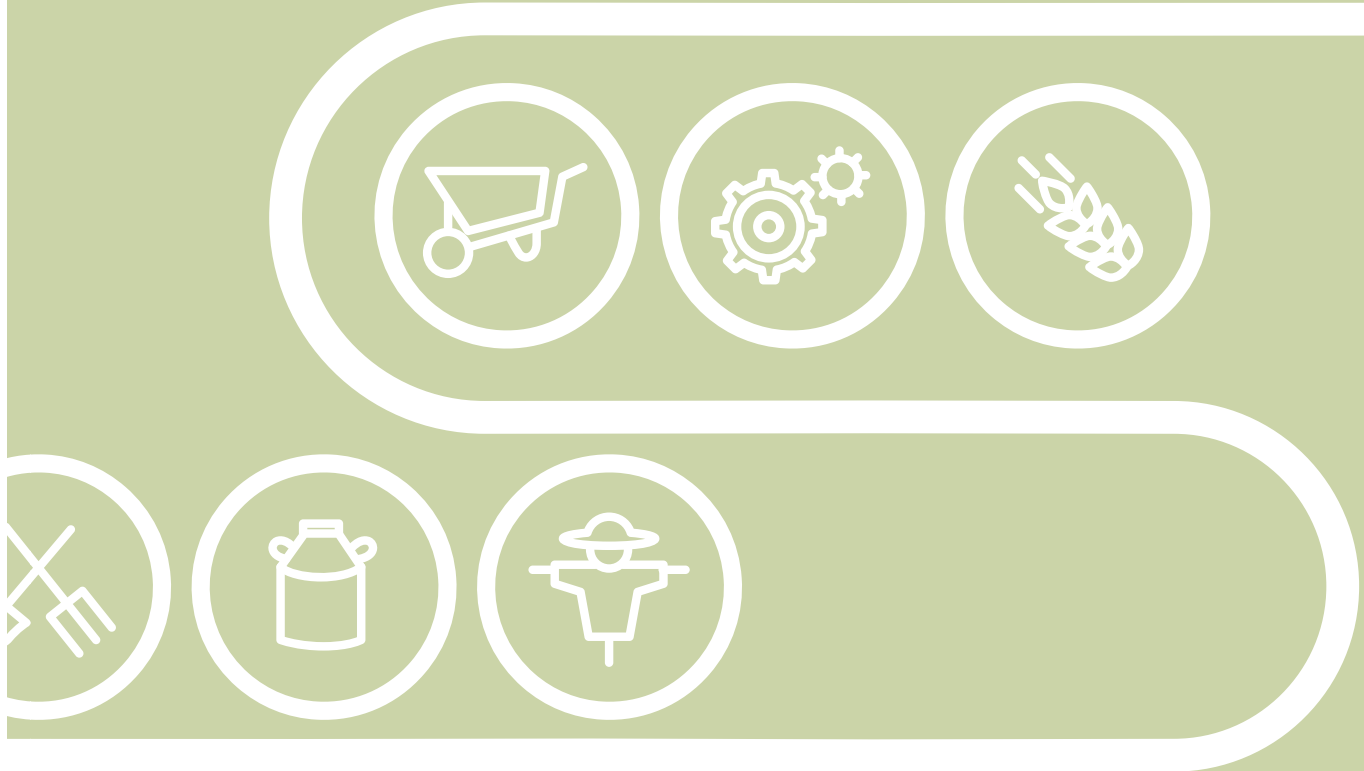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및 수급안정 기여

도매시장 대형거래의 안정적 확대



3 소비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사례





- 3-1 농촌 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 추진
(양평군 10개 마을)
- 3-2 영유아기 식생활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38개 어린이집 대상)
- 3-3 GAP 유통 활성화(홈플러스 GAP 농산물 확대)
- 3-4 7개 교육대학의 교과과정 내 식생활교육 과목 포함
운영(7개 교대)
- 3-5 농식품 정보누리 클릭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원스톱 제공
- 3-6 지리적 표시품 판로 확대(농민의 진심-더프리미엄)

㉠-1 | 농촌 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 추진(양평군 10개 마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기관·기업체·민간단체 등과 협업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제공 등 통합체계 구축

좋은 먹거리와 바른 식습관을 통한 건강의 유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이자 국민 경제에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산력의 원동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교육과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현장 곳곳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식생활 관련 작은 사업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성장과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 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독거가구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고, 시장이 멀고 상점이 부족하여 절임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고령자 중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대로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한 비만의 경우 농촌지역 노인 비만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도시지역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 노인독거가구 비율('11 노인실태조사) : 동 지역 17.6%, 읍·면 지역 : 23.9%
- * 연평균 개인지출 의료비(보건산업진흥원) : (65세미만) 39만원 → (65세 이상) 91
- * 노인비만 유병률(%) 추이 : ('98년, 도시/농촌) 29.8/18.7 → ('05) 34.4/29.9 → ('12) 34.7/33.1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고령자의 건강과 영양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기업, 단체·협회 등과 협업하여 식생활교육은 물론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제공 및 조리지원 등을 종합한 「농촌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에 있어 농식품부는 식단구성과 식생활교육, 조리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보건소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기업체·단체·협회는 농촌노인의 섭취가 부족한 단백질류 중심의 식품지원을 함으로써 관계기관, 기업체, 단체·협회 등과의 협업의 모범적 사례로 그 취지와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농촌의 복지 정책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농촌 고령농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배려농정'의 지속과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 또한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협업을 통한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농촌지역 고령자의 삶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효과

- 농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효과
- 노인성질환 위험의 감소 및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 장기적인 식생활교육 지원으로 의료비 사용 감소



선진국은 이미 국민건강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일정한 식생활에 대한 지도·교육을 모든 선진국의 공통적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발맞춰 영·유아부터 학생, 청·중장년 및 노인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 식습관은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생동안 식품에 대한 가치관 형성 및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농식품부, 복지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협업을 통해 어린이집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현장체험 및 교재·교구 지원 및 보육교사 워크숍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을 통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㉔-2 |

영유아기 식생활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38개 어린이집 대상)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의 시작 영·유아부터!

효과

영·유아 시기부터 바른 식습관 형성

성인병 사전예방 등 사회적 비용(의료비) 절감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㉓-3 |
GAP 유통 활성화
 (홈플러스 GAP 농산물 확대)

민·관이 손잡고 안전 GAP 농산물 공급 확대



효과

-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 농업인의 안정적인 GAP 판로 확보**
- 우리 농산물의 품질 · 안전 기반 마련**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먹는 상추, 굴, 사과 등 안전한 먹을 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중 FTA 타결, TPP 등 국제 시장은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품질·안전 경쟁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식중독 균과 같은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가 개방화 시대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경쟁력·안전 농산물 공급의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의 GAP 농산물 유통량은 10% 미만으로 저조한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홈플러스와 전국GAP생산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15.9.11.)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GAP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작년 말까지 제로에 가까웠던 GAP인증품 취급액이 '15년 11월 현재 80억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현재 맛타리버섯, 파프리카, 감자, 깻잎 등 14개 인증품목이 매장에서 판매중이며 앞으로 GAP 인증 물량을 홈플러스 전체 취급 물량의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플러스와 GAP 생산 농업인이 원활하게 GAP 인증을 취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GAP 교육,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 GAP 인지도 제고를 위한 GAP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GAP 우수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농가를 발굴하는 등 산지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건강 관심 증대와 잘못된 식습관·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료비 등) 절감을 위해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아동기부터 바른 식생활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 교육대학교*(7개교)를 중심으로 예비교사 대상 식생활교육 교과목을 신설·운영을 하고 있다.

* 서울교대, 춘천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제주교대

초등 예비교사는 장차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와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 식생활교육은 그들의 식생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 개발된 표준교육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바른 식생활 정의, 식생활과 환경 및 농산업, 전통 음식의 이해·만들기 및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 '14년 전문 집필진(교수, 교사, 영양사 등)을 통해 '식생활교육 기관용' 교육 교재 개발

결국 이를 통해 예비교사 단계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다보면 향후 초등학생들이 폭넓게 식생활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이는 초등학교 식생활교육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㉞-4 | 7개 교육대학의 교과과정 내
식생활교육 과목 포함 운영(7개 교대)

교대 “예비교사” 식생활교육 역량강화!

효과

예비교사의 식생활교육 역량강화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㉔-5 | 농식품 정보누리 클릭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원스톱 제공

「농식품정보누리」 클릭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한눈에

효과

농식품 관련 정보 연계·통합 제공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제공

농식품 정보검색·활용 편의 증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농식품 안전, 소비·식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14년부터 기존의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농식품 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으로 확대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농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소비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식약처, eT 등 16개 기관 21개 사이트와 농식품정보누리를 연계하여 농식품 소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기관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식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정보누리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한 번 입력하면 소비·식생활, 가격, 안전, 조리법, 영양 등 소비자가 생활속에서 필요로 하는 농식품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이올리, 농식품 취재단 운영, 서비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유익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농식품정보누리 접속인원이 '12년 168천명에서 '14년 378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정보누리 모바일 웹'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 '2015년 콘텐츠제공 서비스 모바일 부문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정부 3.0 우수사례로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는 등 농식품정보누리가 정부가 제공하는 농식품 대표서비스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농식품정보누리는 소비자 중심의 건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소비자 육성은 물론 다양한 소비, 식생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소비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방, 협력, 소통 등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과 협업하여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홍보 및 유통활성화에 나섰다.

* 지리적표시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영홈쇼핑을 통해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 전문 프로그램인 '농민의 진심-THE프리미엄'을 매주 목·금 오후 4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편성 방영하였다.

정액 고정방송 편성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품별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과 공영홈쇼핑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리적표시 농식품이 방송 전파를 타고 소비자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이다.

'농민의 진심-더 프리미엄'은 총 18회 방송을 통해 6억4천 5백 여만원(방송 주문량 기준, 회당 평균 3천6백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김장시즌에 맞춘 영양고춧가루, 영광고춧가루 등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한 고흥석류즙 제품은 6천만원 이상 판매 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리적표시에 대한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㉞-6 | 지리적 표시품 판로 확대
(농민의 진심-더프리미엄)

지역특화 농식품 판매 활성화


효과

- 지리적표시에 대한 인지도 향상
- 지리적표시 농식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





03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발행일	2016년 1월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편집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국장 허태웅
감수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준원
집필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형석, 사무관 김희중
기획	 농림축산식품부

디자인·제작 한라기획
Tel. 044-868-7334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